



# 인권하루소식

99년 9월

(제1446호 ~ 1464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1일(수)

제 144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지 기자 조유식 씨(35) 등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행과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백승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지난달 30일 "28일 접견에서 김 씨가 '조서 날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사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며 조 씨도 '기마 자세로 벌을 서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해 왔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한 "김 씨의 오른쪽 정강이 부근에서 1cm 가량의 상처를, 조 씨의 무릎 뒷부분에서는 구둣발에 차인 것으로 보이는 지름 2cm 가량의 멍 자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 변호사는 29일 김 씨의 모친, 정일용(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씨와 함께 수진신청서(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청)를 접수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와 조 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외부진료 결과 '가볍게 긁힌 정도'의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29일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접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31일 오후 4시경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접수했다.

항고장에서 백승현 변호사는 "29일

김 씨와 조 씨 등의 검진을 위한 수진신청을 거부한 것과, 접견과정에서 수사방해 운운하며 4,5명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피의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준항고이유를 들었다.

김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8월 19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에 내려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21일 구속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김 씨 등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잠은 서초 경찰서에서 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하루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9월 8일 김 씨 등에 대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핵폐기물 위협 고조

####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취 촉구

'움직이는 체르노빌'이라 불리는 핵폐기물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핵운동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핵폐기물 관리현황과 처리기술'에 관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녹색연합 충청본부와 청년환경센터(준)는 핵폐기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방사능 유출 위험이 큰데다 제처리될 경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청년환경센터(준)의 이현석 대표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선진국이 제3세계에 내다버리는 핵폐기물을 비롯한 유독성폐기물이 4억 톤에 달한다. 러시아 등 일부 제3세계의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제국주의'가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는 2008년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완성하고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립한다는 방침을 수립해놓고 있다. 청년환경센터(준) 등은 정부방침의 철취를 촉구하며 오는 13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 알림

### (가칭) '반 국가보안법 국민연대' 발족 예고 및 국가보안법 관련 시국성명 발표

때: 9월 1일(수) 오전 11시

곳: 철학카페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

문의: 02-741-5363(김정희)

###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지난 6월 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수) 오전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으로 △지문날인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된다는 사실 △경찰기관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 △주민등록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서도 지문정보를 전산화시킬 근거규정이 전혀 없음을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요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서한에 대해 서울시는 "지문날인을 본인이 거부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소지의무조항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삭제되어 주민등록증 갱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3일 운동본부 앞으로 보내왔다. 또한 "날짜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협박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회신의 접수 이후에도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호소가 끊이지 않자 운동본부는

### 진보네트워크, 또 다른 도약

#### 사회운동정보 종합검색 서비스 시작

98년부터 정보통신네트워크 서비스를 담당해온 진보네트워크는 9월 1일부터 사회운동정보 종합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

홈페이지검색, 사회단체 정보검색, 사회운동 자료검색, 사회운동 뉴스검색 등이 일괄적으로 서비스됨에 따라 진보네트워크는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의: 02-774-4551, http://www.jinbo.net)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는 경고 서한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

운동본부는 지난 7월 1일 사회인사 151인의 제1차 지문날인 거부선언과 7월 19일 1453명의 제2차 거부선언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주의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태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우편물 발송 또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한 행위 (서울시 남가좌 2동, 성남시 성남동, 진주시 가좌동, 창원시 팔용동: 미거주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권말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직권말소를 당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

- 수 차례에 걸쳐 개별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 (서울시 압구정동, 인천시 주안 5동, 경북 영덕군)

- 집 대문 또는 공개장소에 주민등록 갱신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 (인천시 주안5동, 서울시 개포1동)

- 주민증 갱신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행위 (서울시 이문3동)

- 통, 반장, 이장을 동원하여 개별 가정에 주민등록 갱신을 종용하는 행위 (목포시 용남1동)

- 현재 주민증을 분실했을 때,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특히, 오른손 엄지의 전자지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주민증 재발급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같은 행위가 발생 할 시에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담당공무원과 상급자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읍, 면, 동 등 일선 공무원들께서 국민 인권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9년 9월 1일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준)

### <인권하루소식> 99년 8월분 총목차(1425-144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25	8/3	1	한총련 냄새만 나도 안된다 - 경찰, 대학생 집회신고 불허 잇따라/ 8·15 사면에 바란다 -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단식농성/ 파도가 잇따간 인권활동가 - 성남의노의집 박홍식 씨, 다른 생명 구하고 숨겨
		2	원광대 '자주대오제건위' 조작의혹 - 가정주부 등 10명 연행/ 통행증을 돌려달라 - 사무금융노조, 미8군에 항의서한/ 주간인권호름(7월 27-8월2일)
1426	8/4	1	인권침해 조사엔 역부족 - 인권단체, 국민회의 의문사특별법안 반대 입장 표명/ <새로 나온 비디오> 또 하나의 세상(행당동 사람들 2)
		2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춘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개혁 대상이 된 사법개혁위원 - 시민단체, 사법개혁위 개편 촉구 서한 전달/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성명서> 의문사특별법안 문제 많다
1427	8/5	1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의문사특별법 서둘러라 - 유가협, 국회앞 단식농성/ 위기에 처한 세계 최연소 양심수 - 버마 군부, 3살 난 여아 투옥
		2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인터뷰> 동국합섬 퇴직자 정희양 씨 - "동료들의 불행이 염려된다"며 직업병 위험 호소
1428	8/6	1	머리 터지고 풀러가야 집회나 - 경찰, 합법 집회 방해하고 폭력까지 행사해/ 한국 땅에서 진혼곡을 - 버마 8·8 민주항쟁 추모제 열려/ 만화사랑방
		2	의료보험통합의 난제와 의의 - 김재광(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 사무국장)/ <현장스케치> '99 양심수가 없는 나라 - 너무나 친근한 여름날의 풍경
1429	8/7	1	경찰, 또 성추행 - 피해여성들, 전 종로경찰서장 등 고소/ 행사와 동정
		2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 휠체어 리프트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축제 -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타 개최돼
1430	8/10	1	미군 설치는데 지켜만 보나 - 주한미군, 군산경찰서 한통속 인권유린/ 어디있나 살상무기 - 물난리로 유실된 대인지뢰 대책 촉구
		2	8·15 사면, 똑바로 풀이라 -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사면/ 주간인권호름(8월 3일-8월 9일)
1431	8/11	1	통신거절 이의 있다 - 통신인들 위헌소송 제기/ 반신반의 대시면 - 법무부 준법서약 고집하나/ 사면권 개정 청원 - 민변, 사면시 대법원장 의견 청취 조항 신설
		2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이경주(경북대학 법학과 교수)
1432	8/12	1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 인권사회단체, '사면권 악용마라' 한 목소리/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 공개 항의서한 보내
		2	<특별 시론>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서준식(인권운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국회의원들 얼굴 좀 보자 - 면담요구한 연대중기노동자 연행
1433	8/13	1	말만 요란했던 대시면 -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개위넘기/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2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 인권법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 방침 반대 / 모성애를 들먹였다 -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만화사랑방
1434	8/14	1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 양심수 기만한 대시면, 전체 22%만 석방해/ <인터뷰>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2	어떤 안보를 생각하는가 -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열려/ <현장스케치> 고국 땅의 설움이 더하다 - 재외동포 단식 농성장을 찾아
1435	8/17	1	불법연행 관천 8·15 -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 김현철 사면 취소 촉구/ 주요공관안내
		2	이동권 2차 정부보고서 토론회 - 정부와 민간 머리 맞대야/ 주간인권호름(8월 10일-8월 16일)

<인권하루소식> 99년 8월분 총목차(1425-1445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36	8/18	1	대학내 성폭력 어디까지 - 경문대 학장, 여교수에게 술시중 강요/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 경찰,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2	국제엠네스티 8·15사면 우려 표명 - 국보법 개전논의에 대해선 환영/ 사면 끝 구속시작 -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김현철 사면 비난 봇물 - 김대통령도 사면권 남용
1437	8/19	1	입에 총 들이대 -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성도 - 민주노총 등 기자회견
		2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지" - 에바다 토론회에서 강도 은 대안 제시돼/ 여성·아동 보호가 규제나 - 규제개혁위 조처에 노동·여성단체 크게 반발
1438	8/20	1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만화사랑방
		2	국보법 개정 논의하자 또 간첩조작 - 강철서신 김영환 긴급체포, 사회중진인물로 수사확대 예상/ 노동법과업 관련 해고 부당 -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해고 인정/ <현장스케치> 사면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일집회' -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는 양심수에 대한 모독
1439	8/21	1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동티모르, 테러 기승 - 독립안 절대적 지지 예상/ 행사와 동정
		2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1440	8/24	1	큰 감옥에서의 투쟁 선언 - 8·15 출소 양심수들, 국보법 폐지 운동 다짐/ 국정원, 프라치 강요 부인 - 싫으면 그만, 강요는 없었다/ 색깔논쟁 한나라당 규탄 - 개정 반대 시대착오적 행위
		2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 18·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주요공판안내 / 주간인권호름(8월 17일-8월 23일)
1441	8/25	1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 통신검열, 감시 강화 우려/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2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 보안관찰법/ 택시노동자 또 분신 - 택시정책 사람 죽인다
1442	8/26	1	국보법 폐지, 대희년의 정신 - 천주교인 2천59인 국보법 철폐 선언/ 정신지체장애인 출신이후 생활보장 절실 - 성교육 강화는 미봉책 불과/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 경찰청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2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④ - 국보보안법 1/ <현장스케치> '역사가 멈춘 민족' 사진전 - 사진으로 고국찾은 제일동포
1443	8/27	1	제자리 땀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분신노동자 끝내 숨겨 - 택시노동자 박용순 씨 운명/ 만화사랑방
		2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 국보보안법 2/ 형평성 잃은 재판부 -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전지구적 인터넷 공동체로/ 진보네트워센터, APC 협력네트워크로 참가
1444	8/28	1	광주교도소, 미결수에 폭력행사 - '소내 폭언·폭행 뿌리뽑자' 거센 요구/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행사와 동정
		2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 인간적인 처우 : 행정법(끝)/ 개발시대 청산요구 - NGO, 신 개발전략 요구
1445	8/31	1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 인신매매, 무임금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부산구치소 총들 사주했다 - 일반수 동원 양심수 길들이기 목적
		2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해야/ 주간인권호름(8월 23일-8월 30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2일(목)

제 144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준비모임은 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연대의 발족을 예고하였다.

이 자리에는 인권목회자동지회의 이해동 목사,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처장 등 각계 지도급 인사 4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국보법 반대운동의 결집을 과시하였다.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정치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간 인권·사회·종교단체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참석자 중의 하나인 문대골 목사(전 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의 지적대로 국보연대의 구성 배경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보법 개정의사를 표출한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논의가 정치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이에 국보법을 반대하는 국내의 분위기가 고조된 현 시점에서 광범위한 연대와 운동의 중심점 형성이 절실하다는 자각에서 국보법 개정과 폐지의 입장을 모두 아우른 연대기구 구성에 입장차이를 넘어 많은 단체가 합의하게 된 것이다.

국보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안보, 남북대치 상황과는 상관없는 독재정권에 의해 내부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

다"며 "대표적으로 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보법이 하루 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최소한 이번 기회에 현 국보법 상 인권을 억압하고 유

린하는 독소조항만이라도 당장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국보법 제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국보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모임을 확대·강화한 뒤 오는 10일 경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7조 완전삭제 대국민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1·2면 상자기사 참조)

#### ◆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문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국가보안법의 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들은 국보법 폐지·개정 입장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국가보안법과 싸우는 광범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연대기구는 서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관용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수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는 가능한 한 개정론의 수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는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절제하면서 함께 전진하는 대국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

#### 원칙

1. 국보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와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를 광범위하게 아우른다.
2. 국보법 7조(찬양, 고무 및 이적) 완전 삭제 입장을 '국보연대'의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한다.
3. 7조 완전삭제 주장을 포함하는 한 각 참가 단체는 개별활동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따라서 이 연대기구 밖에서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대쪽 개정이나 폐지 주장을 펼 수 있다.
4. 국보법(특히 7조)의 벽을 넘어 민주발전을 실현한다는 공동과제 앞에서 가입단체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 대한 최대한의 관용을 실천해야 한다. 다수결 보다 전원일치의 정신으로 사안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론과 설득으로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이 연대기구에는 단체와 개인이 참가할 수 있다.
6.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1999년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다.
7. 이 연대기구의 가칭을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로 한다.

###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지난달 28일 면회에서 아들의 다리에서 살이 뜯어져 나간 상흔을 확인했다. 내 아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게 아니고 무엇이나"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환(36)씨의 어머니 조성자 씨는 격한 감정으로 국가정보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했다. 김 씨와 같이 구속되어 있는 하영옥(36, 서울대 법대 82학번) 씨의 어머니는 "차마 할말을 모르겠다"며 눈물지를 뿜어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회원들과 구속자의 가족, 학생 등 1백 여명은 1일 오후 3시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국정원)의 고문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 국정원장 면담 △ 고문수사중지 △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하에서 그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노하였다.

이날 오후 6시경 민가협 대표단과 구속자 가족은 김 씨 등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국정원측은 "면회한지 일 주일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구속자들의 변호인인 백승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일반피의자와 다르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피의자들의 가족면회를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수사기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후 5시경, 김 씨 등 구속자에 대한 외래검진이 변호인측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이날 김영환 씨와 조유식 씨를 검진한 정일용(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씨는 "김씨의 무릎 아래 정강이에 난 상흔은 외부가격에 의한 외상이며, 조씨의 무릎 뒷부분에서 확인된 피부염증은 부엌에 안티프라인을 과다하게 발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진찰 후 국정원측 의사와 공동 확인 작업을 한 결과 외상이라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폭행을 당했으며 29일 외래검진을 거부당한 뒤, 그 다음날인 30일부터 국정원측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알림

<인권하루소식> 인권 시평이 새롭게 단장합니다. 9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9년 하반기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내희(중앙대 교수, 영문학),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공선옥(소설가), 이재훈(한겨레신문 기자),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국보현대' 제안이유

1. 작년 말부터 국보법 철폐를 위한 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개정논의가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반 국보법 논의는 정치권의 논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 반대운동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세력과 운동의 중심점이 생성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또다시 우리 사회의 야만성을 드러낸 '색깔논쟁'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우리의 오랜 소망에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또다시 기만적 소폭 개정에 그칠 조짐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우리의 출발은 이미 많이 늦어버렸다.

2. 국보법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보법 제7조(찬양·고무·동조 및 이적)야 말로 오랫동안 우리의 인권상황을 전근대적 수준에 묶어두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 알다시피 국보법 제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다.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 바로 7조이며 유엔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7조이며, 국보법 구속자 중 약 93%가 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국보법 반대운동은 '철폐!'가 아니라 7조 폐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7조 폐지에 방점을 두지 않는 한 국보법 운동은 진정한 국보법에 반대할 의사가 빈약한 운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이상과 같은 인식을 철저히 공유하는 광범위한 전선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즉,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폐지를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는 개정론자가 함께 하는 연대기구의 형성, 되도록 '정치'의 언어를 억제하면서 철저히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국보법의 벽에 함께 도전하는 참신하고도 광범위한 통일전선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광범위한 통일전선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국보법 7조의 완전삭제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인식에 입각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7조의 존폐를 둘러싼 싸움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1999년 9월 1일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단체 일동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3일(금)  
제 144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 국보법 개폐 위한 전국 연대 필요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기구를 오는 10일 발족하기로 한데 이어,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천주교 연대, 국보법 폐지 선두에

이미 천주교인 2천인 선언 등을 조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각 당 국회의원들과 법무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의미'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천주교연대회의는 약 10만 명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서명'을 국회개회 시기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전국연합이 주축이 된 '국가보안법 철폐 범국민 행동연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각각 한나라당과 자민련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는 두 당의 색깔시비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공대위'도 오는 11일과 18일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경실련도 오는 8일 공청회를 열고 국가보안

법 개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대안 및 방향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 지역단체 연대조직 결성

지역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에서는 이미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대책위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총 34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광주연대회의는 매주 목요일 집회를 가지는 한편 지역 인사 116명의 국가보안법 철폐 선언을 가졌다. 광주연대회의는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시민 등반대회와 시와 노래의 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전북지역 역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와 인권연대 등 19개

지역단체가 참가한 전북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지난달 말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며 지역 종교단체 대표들의 사발시위를 갖은 전북 연대회의는 오는 9월 초순경 종교인들이 주축이 된 단식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 충주, 울산 지역도 각각 지역의 모든 단체가 망라된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 대국민 선전에 나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싹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전국적 연대기구 필요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가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연대가 어려워 활동이 지역에 한정돼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폐지가 원칙이나 이후 행보 속에서 전체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개정론자와의 연대도 가능하다"는 부산 민가협의 이광영 사무처장의 지적처럼,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한 단계 상층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조직의 결성과 개폐론자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 창원대 법대생, 과 교수 고소

서울대 우조교 사건에 이어 또다시 대학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제자들에게 의해 법정에서 서게 됐다.

경남 창원대 법학과 공 아무개(23) 씨 등 3명의 여학생들은 같은 과 송민호(49)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28일 창원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송 교수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송 교수가 MT·회식자리에서 여학생들에게 과도적으로 접근, 허벅지를 더듬고, 거드름이든 손을 넣어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송 교수의 이런 행동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심한 수치심으로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에 송 교수를 세운 여학생은 3명에 불과하지만,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피해를 보고도 고소하지 못한 여학생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송 교수에 대해 3개월(8월 11일~11월 10일) 정직처분을 결정했지만, 이 학교 법학과 학생들은 송 교수의 공개사과와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법학과 학생회장 변성민(23) 씨는 "학생들이 쓴 자필진술서에 대해 교육부가 많은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 문제가 있겠지" 하는 식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후에 다시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며 피해 여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다는 소문이 떠돌던 지난 4월부터 송 교수는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오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한다"고 강의 시간에 공공연히 엄포를 놓았고, 1학년 신입생에 대한 성추행 사실들이 드러나 하

생들 사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학과 3학년 여학생들은 피해사례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법학과 학생들은 전체 비상임시총회를 통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 14일 송 교수의 퇴진 및 수업거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1백46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결의한 바 있다.

### 공안사범 총돌유도 명백

####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부산구치소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부산, 울산지역 사회, 인권단체들의 목소리가 뜨겁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대책위원회(대표, 김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송(35)모 씨의 양심선언은 영남위 사건 관련공안수들의 이갑명분으로 내세웠던 일반제소자들과의 충돌이 구치소측의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법무부와 부산구치소는 이

번 사건을 '사실무근'으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지 8월 31일자 참조)

또한 부산 인권센터(대표 원형은)도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그동안 구치소측의 부인인 인권유린사건들이 왜곡되어왔지만 한 재소자의 양심적인 폭로로 재소자의 인권탄압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났으며 폭력행위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공안수 총돌유도사건은 필로폰투약혐의로 수감중인 송 씨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형식의 문건을 변호사인 천정규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에게 제출, 이를 천변호사가 30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구치소측과 '중인과 목격자의 진술'로 사실을 주장하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의 이동준 판사는 1일 오전 교도관의 재소자 집단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천 변호사가 30일 제출한 증거보존신청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6일 교도관들에게 빼앗긴 상처부위 촬영필름과 녹음테이프, 재소자들의 자술서를 구치소로부터 압수했다.

## 8시간 일하고 싶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지난 1일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최상림, 전국여노)이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우리 나라 최초의 전국단일여성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국여노는 출범과 함께 여성노동자들의 고용현실을 파악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욕구 조사를 통하여 전국여노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전국 8개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 422인의 현실과 희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들의 희망은 '정규직' 신분으로 1백1십7만5천원의 임금을 받으며 1일 평균 7시간 46분을 일하고, 년 23일의 휴가와 106일의 출산휴가를 갖는 것이다. '희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성 노동자들이 밝힌 희망 노동시간은 98년 현재 통계청이 밝힌 주당 평균 노동시간보다 7시간이나 많다. 응답자의 65.4%가 희망하는 1일 평균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대답해 법정노동시간만이라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가 아예 없다는 응답이 29.6%에 이르러 법정 출산휴가 60일이라는 기준을 무색하게 했다. 전국여노는 이 조사를 기초로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4일(토)

제 144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이적단체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원심파기와 상고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와 형사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3일 영남위위원회 사건 상고심을 열고 재판과정에서 유죄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스켓에 수록된 문서들이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 성립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바 없어 위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디스켓 상의 문서들이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성립된 이은미(울산여성회 준비위 회장), 정대연(울산연합 회원) 씨 등의 사건은 원심이 파기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내졌다.

또한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비디오 촬영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허가 없는 촬영을 용인했으나 "제출된 비디오 테이프 및 그 내용 일부가 현상된 사진만으로 피고인들의 이적 찬양, 고무, 동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도 도청이 신고된 기한과 대상을 초과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 김창현 동구청장, 유죄 확정

그러나 재판부는 김창현(전 울산동구청장), 박경순(늘푸른서점 대표), 방석수(전 민주노동 울산본부 교육선전부장) 씨 등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

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는 폭력적 방법의 정부 전복과 새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북에 동조해 북의 사상을 선전, 전파하고 있고 조직의 노선과 체계 등에서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남위원회 활동이 인정된 김창현 씨에게는 징역 2년, 박경순 씨와 방석수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창현 씨는 이로써 울산 동구청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됐다.

#### 인권이사회 제소 계획

김창현 씨에 대한 원심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및 영남위 사건 구속자 무죄

석방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일사건에 대한 상고심 기각과 원심파기라는 판이한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 기각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행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을 비롯한 부산·울산 지역의 노동·제야 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한데서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김창현 씨 등 15인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구속시켰는데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위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사왔다. 또한 무리한 도·감청 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 행사와 동정

- 참여연대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시민운동, 21세기 대안을 찾아"
  - 주최: 참여연대(723-5300)
  - 때: 9월 4일(토) 오후 1시~4시 / 곳: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 세미나실
- 잊지 않는 사람들 류춘도 시집 출판기념회
  - "전쟁과 분단 55년으로 가는 길의 해원곡"
  - 기획: 여성문화예술기획 후원: 민기협/ 도서출판 사람생각
  - 때: 9월 5일(일) 오후 4시 / 곳: 중구 필동 한국의 집(2266-9101~3)
- 신채호님 요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
  - 주최: 고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 때: 9월 6일(월) 오후 3시 /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468-4925)
- 국가보안법 개혁방향에 대한 공청회
  - 주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사) 경실련 통일협회
  - 때: 9월 8일(수) 오후 1시30분~4시 / 곳: 경실련 강당(754-8841)

#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경찰이 한총련 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해 가족들을 협박·회유하고 심지어 매수를 시도해, 가족들이 경찰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학부모협의회(상임의장 김종맹, 한학협)는 3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이 수배 학생들을 검거한다는 이유로 수배 학생들의 가족을 협박, 회유하고 불법적인 도청을 하고 있다"며 갖가지 피해 사례를 폭로했다.

한학협 소속 8인의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 3대대 정준기 경위 등 16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순경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소속 이재일 형사는 김명이(한총련 수배자 김성숙 씨의 언니) 씨에게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동생을 자수시키면 현금 5백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이 형사는 김씨가 집에 없는 사이에 5백만원을 놓고 간 후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면 5백만원을 더 주겠다"는 전화를 늦은 밤에 여러 차례 걸어왔다. 시달림 끝에 김 씨는 이형사의 주머니에 몰래 돈을 넣어 돌려주었다. 경찰은 김 씨의 큰아버지의 통장에도 3백만원을 입금시킨 후 "자수시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으로 회유했을 뿐만 아니라 전화감청을 감요한 일도 있다. 홍덕수(한총련 수배자 홍춘호 씨의 부친) 씨는 아들이 97년 8월부터 정치수배를 당한 후 입영이 불가능하자 행방불명 처리를 결심하고 김포시 양촌면 면사무소를 찾아가다. 이때 성명불명의 보안수사대 형사와 면사무소 병무관련 담당자는 "아들에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집 전화를 감청하도록 협조하면 그 후 행방불명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홍 씨는 어쩔 수 없이 감청 협조에 응했으나 견디다 못해 감청허락서 반환을 요구했다. 관련공무원은 이

미 문서를 폐기했다며 반환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다전(한총련 대의원 김대성 씨의 부친) 씨의 경우, 지난해 3월경부터 정준기 경위 등 3명의 경찰이 수시로 찾아와 아들을 자수시키도록 종용하면서 "사위가 은행에서 대부계를 보더라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놈이 어디 있느냐"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 "모친 위독 급히 귀가"라는 허위 전보를 보내게까지 했다.

한학협의 김종맹 상임의장은 "법정에 고발한 경찰이 16명에 불과하지만,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고발로 계속 이어져 불법적인 경찰의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부천시 상동 신상리 택지개발지역 주민들이 지난 2일 오전 11시경부터 부천시장실 앞에서 "폭력사태의 배후조사와 책임자처벌, 부천 남부경찰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전경 1개중대의 엄호아래 철거가 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송혜월(여, 68)씨를 비롯한 8명이 부상을 당해 인천 중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이들은 무릎과 허리,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 상동 세입자대책위원회(대표, 배운성,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시행중인 부천시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토지공사) 및 대책위 3자가 만난 자리에서 상동 지역에 대한 강제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공사차량 진입로를 내는 구역만을 철거하는데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대책위는 이런 사전약속을 어기고 강제철거를 자행하도록 방조한 부천시청과 토지공사의 처사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고 아무개 과장은 "이주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세입자들은 거주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철거작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는 "대규모택지개발공사에서는 건설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시행중인 부천시의 도시개발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철거민들의 항의농성이 거세지자 부천시와 토지공사 상동사업단은 3일 오후에 대책위를 만나 2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상사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철거를 할 때에는 대책위와 사전에 협의해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순환식 재개발로 철거민들의 생활공간을 마련해주겠다고 해 대책위는 3일 오후 4시경 농성을 정리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현행 택지개발과 관련해 철거민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한 '가수용시설'이나 '순환식재개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알 린 ●

# 가자! 법원으로, 무죄! 서준식

인권운동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선고공판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5호선 애오개역)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7일(화)

제 1450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산재 요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6월 산재 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산재노동자 관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자리였다.

보험료 줄이면서 관리비는 늘려

발제를 맡은 고재열(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회장) 씨는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98년 2월 보험료 지급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IMF제체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을 산하 지사에 하달하는 등 산재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97년에서 98년 사이 산재보험기금 지출이 10.3% 감소하는 등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건비, 건물유지비 등의 관리운영비로 쓰이는 공단 출연금은 5.1%증가해 고통이 노동자에게만 전담되었을 뿐임을 보여주고 있다. (98년 국감자료 참조) 이어 조옥화(인천산업사회연구회 대표) 씨는 "산재인정기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엄격한데 '요통'의 경우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해 요양을 인정하는 확률이 50% 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천3백만 노동자 중에 8백여 만 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문제 △급여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는 문제 △산재보험 정책 결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형식적 참여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남달웅 보험급여국장은 "산재 현황을 파악해 조치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조옥화 씨가 제안한 4대 보험의 통합에 따른 인력활용 방안에 동의를 나타냈다.

"치료중단" 통보 뒤, 자살 잇따라

IMF이후 산재노동자들이 장애에 대한 비관과 생활고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98년, 99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99년의 이상관 씨(하루소식 7월 16일, 8월 18일자 참조), 98년 박광재 씨가 그 예다.

박광재 씨는 97년 9월 2일 성원토건 설비작업을 하던 중 드릴에 손등과 목 부분을 심하게 다쳐 산재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부터 '치료를 그만 받아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후 생활고를 못 이겨 비관하다 98년 11월 5일 자살했다.

한편, '공대위'는 40일째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창ыл 및 진주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의 해임과 관련자 처벌, 이상관 씨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상관 씨에 대하여 "이상관 씨의 자살을 현행법과 제도 아래서 산재로 인한 자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

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에바다 사태 새 국면

## 개혁 이사진에 힘 실릴 듯

1천일이 넘는 에바다 사태가 평택시의 '재단 정관변경' 인가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달, 이성재 이사장(국민회의 의원) 측이 낸 '에바다 재단 정관변경' 신청이 9월 1일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진 가운데 2/3 출석과 찬성만으로 가능하던 이사회 의결이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만으로도 가능해지는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간소화됨으로써 그동안 천체단측 이사진들에 의해 발목을 잡혀 온 재단 개혁작업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이사회는 이성재 이사장 등 4명의 관선 이사와 재단설립자의 친인척 등 3명의 재단측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96년 시작된 에바다 사태는 오는 11월 27일로 3주년을 맞게 된다.

#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 민교협 성명

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등으로 검찰이 무려 5년이라는 보복성 구형을 한 것이 우리의 인권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인권의 원칙과 정의의 수호하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면에 선고공판 안내>

인권하루소식 여섯 들! -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도행 씨를 생각하는 미사가 6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전진상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영옥 신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미사에는 이도명 변호사를 비롯해 약 80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집전했다.

미사를 집전한 김 추기경은 "국가가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때에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확실한 물증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하게 죄인이 된 이들을 위해 지난 8월에 결성된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은 "부인과 딸을 잃은 고통을 위로받긴 커녕 거꾸로 부인과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사법부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견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95년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재개될 예정이다.

### <해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있어 간접증거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은 사법사상 가장 참혹한 판결이라는 지탄을 받으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입증이 가능하다"며 간접증거를 증거로 채택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씨는 이 판결로 인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었으며 그간 사법부의 대원칙으로 여겨져온 '검사의 유죄입증 원칙'(검사가 제시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한다)은 무참히 파괴됐다.

결국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사의 책임은 방기되고 '열 사람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죄인 발생을 막아야한다'는 사법부의 인권보호원칙이 깨어진 것이다. 반대로 피고인은 스스로 무죄를 증명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돼 이를 증명하지 못할 시 기약없는 감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 ○ 알림 ○

## 가자! 법원으로, 무죄! 서준식

인권운동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선고공판

9월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5호선 애오개 역)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주간인권호름

(99년 8월 31일-9월 6일)

1. 국가보안법 반대 조직화 박차  
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 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기로, 1백 개 단체 이상을 조직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발족 예고(9월 1일)

2. 영남위 상고심,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대법원, 논란이 된 디스켓 증거능력 인정 안해 영남위원회 사건 일부 파기환송, 그러나 전 울산동구청장 김창현 씨 등에 대해서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원심 확정 판결(9월 3일)

3. 수배자 검거 혈안, 협박·회유·매수 몰사  
수배중인 한총련 대학생 학부모들,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가족들을 협박, 회유, 매수한 사실을 밝히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관련 경찰 고발(9월 3일)

4. 제버릇 남뚝주는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감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 등, 국가정보원에서 폭행과 잠안제우기 등 가혹행위 당했다고 주장. 이어 변호인의 수진신청이 거부되고 점견을 방해받은 것과 관련 민변은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 접수(8월 31일)

5. 지문날인 제대로 따져보자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 또한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 발송(9월 1일)

6. 동티모르, 압도적 독립지지  
지난달 30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티모르 독립지지만 것으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공식발표(9월 4일) 인도네시아 결과 수용하겠다고 밝혀, 한편 동티모르 독립투표 뒤 폭력사태 격화, 결과 불복하는 민병대 테러 위협고조, 유엔평화유지군 파견 적극 검토 중

7. 막술길 막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감소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가 아닌 폭언만 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서울고법 판결(9월 4일)

인 권  
시 평

# 우리 할머니 신전택

공선옥(소설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지면에 이 시대, 세상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평범하고 힘없는 백성의 모습을, 그 사람들의 풍경을 적고 싶다. 그리고 그 풍경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아무리 힘없는 백성이지만 그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는, 지극히 단순한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다.

우리 외할머니는 올해 여든 여섯을 접수했다. 성함은 오명순, 택호는 신전택(新田宅). 우리 외할아버지는 1948년도에 돌아가셨다.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죽골에 사셨는데 이른바 '여순반란사건'의 와중에 국군 토벌대에 의해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반란군들한테 옥수수 몇 개 건네줬다고' 발갱이로 몰려 그 마을 사람 열다섯 명과 함께 한남한시에 마을 앞산으로 반란군 잡아내라고 '토끼몰이'를 당하여 그대로 뒤에서 토벌대가 쓴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 그때 우리 외할머니, 신전택은 우리 외삼촌을 임신 중에 있었다. 말하자면 우리 외삼촌은 유복자다. 위로 우리 엄마를 포함하여 딸 셋이 있다. 이후 신전택은 그야말로 빨갱이 누명 쓰고 죽은 남편으로 인해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혼자서 자식 넷을 키우며 갖은 고생을 하게 된다. 딸

셋은 먹고살기 힘들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한 채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 버렸고 아들 하나도 겨우 초등학교밖에 가르치지 못하여 지금 오십 줄의 외삼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는 집안의 농사일을 하다가 작두에 손가락을 잘리는 수난을 입었다. 나이 열여섯부터 목공일을 배워 객지를 떠도는 삶을 살고 있다. 외할머니도 아들을 따라 객지를 떠돌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한 십년 된다. 그 동안에 외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장만하여 부처 먹던 산비탈 다락논이 '일제정리' 기간에 외할머니가 객지를 떠드느라고 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땅'으로 넘어가 버렸다.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국가땅으로 넘어간 것도 모르고 고향에 돌아온 십년 동안 아무 탈없이 농사를 지어먹다가 바로 작년 설 무렵에 장조카별 되는 마을 이장으로부터 신전택 논이 국가땅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외할머니는, 그만 병을 얻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한테 그 땅이 원래부터 신전택네가 지어먹던 땅이라는, 그러니까 이녀 남편이 마련한 땅이라는 서명을 받아서 군청으로 들고 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해서 우리 할머니, 신전택은 이녀이 객지를 떠돌면서도 목숨처럼 지니고 다니던 일제시대 때의 평문서를 공무원에게 보여줬지만 그 평문서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참씨개명된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그 또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였다. 외할머니 성함이 '마준하'고 참씨개명된 이름이 '장곡천'인데 마준하와 장곡천이 같은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다 줘야 된다는 것이다. 족보를 뒤져 결국 마준하가 장곡천임을 증명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팔순의 우리 할머니가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그 비인간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정말 부아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 <필자 소개>

소설가 공선옥 씨는 1963년생으로 91년 개간 「창작과 비평」에 중편 「씨앗밭」을 발표하며 작품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으로는 「목마른 계절」, 「우리 생애의 꽃」, 「오지리에 두고 온 서른 살」, 「피어라 수선화」 등이 있습니다.

공선옥 씨는 앞으로도 일반적인 시평 형식과 달리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시평을 맡아 줄 계획입니다.

## 채찍과 격려, 하루소식의 자양분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겠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어느덧 여섯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느 독자께서는 "아마추어 일간 소식지인지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인권관련 일간지인지 잘 모를 정도"라고 통렬한 비판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좀 더 프로페셔널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독하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같은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인권하루소식 편집팀에겐 달가운 채찍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지켜보고 있고 그만큼 기대도 바람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여러분의 격려 또한 저희에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칫 빠지기 쉬운 관성과 나태함의 유혹을 딛고 이 시대 인권의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인권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개척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참신한 기획 마련에도 힘을 쓸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편집팀>

### ○ 알림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 때: 오늘(화) 오전 10시
- 곳: 명동성당 뒤 성모동산
-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 돌림
- 주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02-3672-0251)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8일(수)

제 14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에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 <참된시작>(박노해)은 이적성이 없다"고 밝힌 반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홍익대에서의 인권영화제 개최에 따른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씨는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 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레드헌트> 반포, <참된시작> 등 이적표현물 소지), 보안관찰법 위반(신고의무 불이행), 기부금품모집법 위반(후원회원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기부금품모집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게되자 검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공소를

취하했다. (본지 6월 16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재판부의 서준식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은 그동안 이적성 혐의를 받아온 <레드헌트>, <참된시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 찬양, 이적 등)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 조항

의 삭제를 주장하는 국내의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들을 재판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온 악법이다. 이에 1996년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보안관찰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준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한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구 신부를 만나

###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폐지 의지 천명

신부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문규현 신부의 27명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들은 7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삭발식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식농성에 동참한 김인구(청주교구) 신부를 만나 단식 참여 계기와 국보법 폐지운동의 전망을 들어봤다.

▶ 국보법 폐지를 현시점에서 주장하게 된 계기는

모든 것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가보안법이며 따라서 개혁의 근본은 이 법의 폐지이다. 국무총리는 국보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언론은 제벌개혁조차 사회주의 정책으로 왜곡되게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침묵할 수는 없었다.

▶ 사제의 입장으로 단식과 삭발을 결의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단식과 삭발은 사제에게 있어 소명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제단의 단식이 정치사회적으로 도덕적 압력이 되길 바란다

▶ 향후 국보법 폐지운동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현재 여야 정치인은 국보법에 관심이 없어 국민이 이 논의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논의로 끝나고 말 것이다. 신자와 국민들에게 이해를 받고 선의의 양심을 갖춘 사람들의 국보법 폐지운동 동참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각 교구 신도들에게 국보법 폐지서명을 받으며 지지를 확인해나가고 있다.

##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기획예산처가 최근 경기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생활보호예산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실업극복운동본부 등 총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법 제정추진 연대회의」(집행위원장 송경용 신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생활보호대상자의 80% 이상이 1년 중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총 7만9천원(1인 기준)을 지원 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예산을 확충하는 것도 모자란 마당에 기존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 축소는 지난 8월 통과된 국민기초생활법의 수혜대상과 혜택내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기획예산처의 예산감소 방안이 확정되면 현 1백91만9천명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백53만9천명 선으로 축소되는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의 대상자와 그에따른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활보호자에 대한 일거리 및 생계비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 16% (2조2천6백억원) 증액해 신청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실업자수의 감소가 예상돼 생활보호예산의 증대가 필요 없다"며 지난 1일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도 적은 1조7천7백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

### 1. 생활보호대상자 과연 줄어드나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분배조사'발표에 따르면, 99년 1/4분기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전분기 대비 9.2% 증가한 반면 하

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오히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수가 97년 3.0에서 99년 1/4분기에는 6.9로 대폭 증가(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장기실직자 가구를 포함할 경우 빈곤층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 급속한 경기회복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증가했다라고 소득 불평등도는 오히려 심화돼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 2. 생활보호대상자의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

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을 상실해 생계수단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 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다. 일정 정도의 자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활보호자로 분류돼 동절기 6개월 동안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최고 1인 가구 7만9천원). 그러나 지원 액수가 턱없이 작고 자활보호자 중 최소 50% 이상은 자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활보호가구의 경우 아동의 결식, 부모의 가솔, 가족의 해체 등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불황이후 한시적 실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지원이 아닌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다. 그러나 공공근로의 경우 6개월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결국 빈

### 새로운 신문

##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활보」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창간 준비호(9월 5일자 발행)

왜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팝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춰라 배워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심의 영역을 제한하게 하는 법을 지금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내 딸들이 교정에서 학생이 아니라 화염병을 던지는 '민주화 전사'로 젊음을 소모하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낱으로 그들을 말할 수 있겠나"며 자식을 둔 어머니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새 천년을 불과 1백 여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등이 참가한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 팀은 국보법 없는 21세기를 염원하며 국보법이 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구성한 신문 「활보」 창간준비호를 발간했다.

「활보」에는 국보법을 주제로 한 생활 속의 국보법, 내가 만든 이적표현물, 매체비평, 문화비평, 박시백 씨의 국보법 이야기, 국보법 해부, 역사속의 국보법 사건 등 다양한 코너가 고정란으로 마련됐다.

이번호에는 '내가 만든 이적표현물' 그 첫 번째로 4·3항쟁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필름에 담아 국보법 상 찬양·고무 혐의로 체포된 바 있던 <레드헌트>의 감독 조성봉 씨의 글이 소개됐다. 조 씨는 체포당시의 상황들을 떠올리며 "정권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활보」는 격주로 발간된 예정이며 신문을 받아 보고 싶은 사람은 각 사회단체나 인권운동사랑방에 연락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다음 호는 오는 20일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문의 02-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9일(목)  
제 14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7일 동두천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 정숙(여, 48세) 씨 사망사건과 관련,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이 또 다시 드러나고 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발견된 이 씨는 2-3일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타살된 것인지 사고사한 것인지 현재까지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망한 이 씨가 미 2사단 하비캡프의 코르 중사와 동거 중이었다는 점 등에 비해 코르 중사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의 어정쩡한 자세와 한미행정협정이라는 걸림돌로 인해 코르 중사의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맡은 위성문 검사(의정부 지청)는 "경찰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코르의 행적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담당경찰인 유재철(동두천경찰서 형사계장) 씨는 "이 씨의 동거인은 이름조차 확인이 안된다"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 군속이나 가족의 범죄에 대해 미군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도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인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군중사 코어의 신병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새우터는 성명을 통해 "미군에 의한 타살의혹을 배제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새우터의 감옥경 부대표는 "평소에 그녀는 동료들에게 코르의 잦은 구타를 호소했었고 발견 당시 방문이 잠겨 있는 것도 그녀의 습관과 다르다. 여

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과 코르 뿐이었다"며 정황 상 이 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유진 사무국장은 "경찰의 말대로 타살이 아니면 고인을 위해서도 차라리 다행이다. 주검이 발견되면 동거인이 참고인으로 조사 받는 것은 상식 아닌가? 이제, 주민들은 미군과 관련 사건은 당연히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며 초등수사의 미흡과 관행화를 꼬집었다.

이 사건에 앞서 97년 4월 홍대 앞 조중필 씨, 98년 8월 군산 아메리카 환전소 박순녀 씨, 올해 초 신차금 씨 등의 살인사건 등도 미군 관련 의혹이 집었지만 미군 측의 비협조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으로 인해 아직까지 진상규명조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국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8일 경실련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석연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진 것은 최근에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된 논

의가 색깔론에 휘말림으로써 공개적인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치적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공론화 하고자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와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발제에 이어 감경근 교수(숭실대 법대) 등 6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적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여야 각 당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복지요구 농성도중

복지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타이어(사장 홍건희) 신탄진 공장 해고노동자 이서광 씨 등 5명은 "회사측이 97년 8월 복지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118일째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 북부경찰서에 고발하고 시설물보호요청을 함으로써 8일 오전 7시 30분 경 이서광 씨 등 3명이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을!" 시민단체,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

독립에 반대하는 동티모르 민병대가 인도네시아 군부의 지원 하에 최소 1천여 명의 동티모르인을 학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오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 참사를 막기 위한 전세계인의 행동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8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동티모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정부와 유엔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동티모르 사태를 "민병대의 만행, 인도네시아에 의한 명백한 침략 및 대학살"로 규정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공동소장 채수일)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국과 UN이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UN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평화유지군 파병 조건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거론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코소보 사태에 개입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UN 평화유지군 파견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 무기판매와 군사교육 중단 등을 요구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인도네

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경제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한국정부 무대응 비난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대해 마련을 촉구하는 전화, 팩스, 메일 보내기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 전화(02-783-5371-2) 및 항의 팩스, 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제품 불매 및 회사 불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항의행동을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동티모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 국제민주연대가 전하는 동티모르 상황

"딜리(동티모르의 수도)의 상태가 아무리 험악해도 딜리로 부터 떠나지 말기를. 밖은 더 비극적인 상황이다. 서티모르의 아타마부아로 향하는 길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머리가 없는 시체를 비롯해 사살되거나 찢겨져나간 사람들의 시체가..."(서티모르로 피난간 딸과 그 모친의 전화내용)

###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9999운동' 비마 국내외서 전개

버마의 군사독재가 37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버마 국민들과 제외 동포들이 전세계 민주세력과 연대해 9일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지난 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 민주화쟁을 기념해 몇 년 전부터 준비된 이 집회는 이름하여 '9999(99년 9월 9일) 운동'이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수도 양곤을 비롯해 버마 전국에서 집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일본, 호주 등 10여 개 국가의 버마 대사관 앞에서도 연대집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 집회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버마 군사정부는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자국내 학생,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검거를 시작했으며, 최근 양곤에서만 1백4십여 명이 체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약 5백여 명이 버마 당국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버마민족민주연합(NLD) 한국지부의 주관 하에 9일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근처(한남초등학교 옆)에서 집회가 열린다.

6일 오후 8시경, 딜리의 UN동티모르 파견단 사무소에 인접한 피난민 집결소를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폭동집단대가 공동으로 습격, 다수의 사망자 발생

7일 오전, 티모르 전국저항위원회(CNRT)의 지도자 레안드로 이사이 살해됨. 7일 현재 민병대가 항구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

### ◎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각국 민간단체들의 대응

일본 천주교 정의평화회의회 : 일본 외무성과 UN에 평화유지군 파견 호소  
오스트레일리아 노조, 학생조직, 민주사회주의자당 등 : 오는 10일과 11일을 '동티모르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전세계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영사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앞에서의 항의시위 제안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팍스 로마나(국제가톨릭지식인문화운동체), 인종진보를 위한 아시아 센터(ACPP) : UN사무총장과 안보리, 인도네시아 정부에 평화유지군의 조속한 파견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세계 각국 단체에 연대 요청.

### 활동은 하는 겁니까?

경찰청 인권보장위 정보공개 요구

8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공동대표 김승환 등)는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배) 인권보장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는 "인권보장위원회가 발족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무슨 활동을 해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며 "시민사회단체의 행정감시를 통해 인권보장위원회가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아래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했으나 그 활동사항은 알려진 바가 없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10일(금)

제 145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 촉구

###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종교계 촛불시위 등을 개최하고 나섰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10개 기독교 사회운동단체들은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 8월 범민족 대화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 정리해 신는다.

####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심사 현장스케치

#### '뭐가 문젠니까?'

9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15호에서는 8월 범민족 대화 참가 등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다. 심사과정을 요약, 정리해 신는다.

판사 : 피의자는 범민족대화에 참가해 무슨 일을 했나요?  
진관 :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별다른 활동은 못했습니다. 광주지역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서울대 근처에 있는 집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판사 : 범민련 통일선봉대는 무슨일을 했고 피의자가 한 일은?  
진관 : 그저 대구, 대전, 부산 등을 다녀왔을 뿐입니다.

변정수 변호사 : 통일선봉대는 통일을 염원하는 이들이 전국을 돌며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 범민련이 이적단체고 범민족대회가 불허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진관 : 예

변정수 변호사 : 남북의 정부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골자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감령으로 삼는단 이유로 범민련 등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또한 아무 문제없이 끝난 범대회를 문제삼아 구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사 : 검찰은 범민련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도피중이라고 하는데?  
변정수 변호사 : 이들은 명동성당에서 그것도 길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며 농성 중이고 그 주변을 수백명의 경찰이 매일같이 지키고 있는데 불상장소에 도피중이냐. 오히려 경찰이 성역이라며 잡지 않고 있는데요.

판사 :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관 : 그간 조심해왔는데 물의를 일으킨 것 같고... 이미 검찰 조사에서도 선처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만, 이런일로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변정수 변호사 : 선처라니, 사람의 양심과 행동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더욱 큰 문제지요.

들의 폐지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김광수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는 기도회 사회를 통해 "반세기동안 국가보안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며 "이 법의 철폐는 성직자가 세상을 바로 잡기위해 앞장서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설교에 나선 이명남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도 "시대와 세상은 변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짓밟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기도회와 목회자로서 마지막 투쟁일 수 있는 집회까지 준비하게됐다"고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함께 자리한 문정현 신부는 "종교를 초월한 합심으로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도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독교인 선언'을 낭독했는데, 이들은 선언을 통해 "화해와 공존의 새 질서를 구축해야 하는 이때에 냉전수구세력들은 악법을 통해 반민족적, 반인륜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기독교인들은 이땅에 양식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예배를 마친 신자들은 국회 앞으로 이동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와 촛불 기도회를 연이어 가졌으며 집회 후에는 기독교회관으로 이동해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 범국민투쟁본부 11일 집회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도 9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투쟁본부(준)는 오는 11일과 18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

##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긴급체포 제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지난 6월 서울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태)는 "긴급구속장 발부없는 피의자 연행 시 48시간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는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벌이던 중이어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1월부터 8월까지 긴급체포된 후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17.5%. 이는 97년 같은 기간의 16.6%, 96년의 8.9%와 비교한다면 현저히 증가된 수치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법 규정을 현행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에서 '48시간 내 영장발부'로 고치는 것이 불법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개혁위의 제안과 관련,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의견도 미흡한 것

으로 보인다. 현 보안처분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자의 행동과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생활침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왔다. 그러나 사개위는 우범자 관찰보호와 보안관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9월 참여연대는 공익제보를 이유로 부당징계를 당한 노동자들의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하고 첫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

꾸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황 씨 등 철도청 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철도청의 부품유용과 열차 탈선위험을 시민단체 및 언론에 제보했다가 위계질서문란 및 명령불복종 등의 영종한 이유로 파면, 감봉, 전출 등의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 황 씨는 "열차수리 때마다 부품이 없어서 운행하고 돌아온 차량의 부품을 때 임시로 대체하는 일이 벌어져 왔으며, 지난해에는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추상발열(열차바퀴의 축이 부러져 열이 나면서 탈선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해 운행정지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어 "노조차원에서 리본투쟁과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청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누가 점심 저녁 시간에 노동가요를 틀었는지, 노조사무실에 누가 대자보를 붙였는지, 누가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의 이상희 변호사는 "황 씨 등은 노조간부로서 차량안전운을 위한 노조활동과 서울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을 뿐인데, 이를 근무기강문란이라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명백히 철도청의 제량권 남용과 노동관계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 만화사랑방

여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11일(토)

제 14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미군의 주권유린 응남 못해

###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돼온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투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녹색연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준비위원회'(이하 국민행동)는 10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문정현 신부 강제유금 항의 및 불평등한 SOFA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어 문규현 신부등 대표들은 미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미군기지전국공대위 사무국장 배종진 씨는 "67년 한미행정협정 체결 이후 단 한번의 부분 개정만 있었고, 95년에 정부가 미국 측에 개정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주한미군범죄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사정관 면담 요구에 수감 체위

지난 8월 6일 문정현 신부와 오우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등 군산 지역에서 미군기지반대운동을 전개해온 4명은 이날 오후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80여 회 동안 금요일집회를 열고 SOFA의 개정 등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해 미군측은 어떤 답변도 없어 사정관 면담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들을 감제로 연행하고, 수감을 체위 미군 기지내에 1시간 동안 억류했다. 또, 지난 6월 28일에는 미군기지 국제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학자와 평화운동가들이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하자 미군측이 탱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동두천에서 주한미군과 동거하던

이정숙(여, 48)씨가 타살의혹이 짙은 가운데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행동은 항의서한에서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불법유금과 학술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탱크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이며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또 "미국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곧 미국이 약소국가 위에 군림하는 제국주의로 비취질 수밖에 없다"고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오늘로 복직투쟁 1천일을 맞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2백45명은 낮에는 포스코와 노동부 등을 찾아다니며 집단시위를 열고 밤에는 여의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지난 97년 2월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고용승계 의무를 어긴채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2백 5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이후 98년 두 번의 노사정회의에서 이들의 복직이 정부와 회사사이에 합의되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사정합의와 대통령의 지시,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올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부암, 중풍 등의 질병까지 얻게 됐다. 많은 가정이 이혼 등의 파탄을 겪었고 투쟁과정에서 2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들 먹고사는 게 어려워 큰애들은 진학을 포기하는 등 우리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하지만 삼미특수강 복직투쟁위원회 김현준 위원장은 "아직 복직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초기에 냉소적이던 가족들이 복직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다른 일을 찾아 나섰던 동료들도 돌아오고 있어 힘이 난다"고 말한다.

한편, 삼미특수강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이 계약서 한 장으로 평균 20년을 일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쫓아내고, 노사정합의를 외면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포항제철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가 1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신노사문화를 말하면서 합법적인 노동자의 생존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부를 누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 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회의 개최 촉구

사재관이 공격당하고 천주교 신부와 수녀들 역시 민병대에 의해 학살되는 등 동티모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로빈슨은 유엔인권위원회가 특별회의를 열어 극도로 심각한 동티모르 상황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메리로빈슨은 "현재 진행중인 강제추방과 학살이 동티모르인들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인권위원회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의는 유엔 회원국의 요청으로만 개최가 가능해 각 정부의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긴급하고 심각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특별회의는 유엔 결성이후 지난 92, 93년 구 유고슬라비아 문제와 94년 르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 소집된 바 있다.

한편 동티모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국내인권단체들은 오는 14일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동티모르의 학살중단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의(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02-723-4255)

결과 발표로부터 채 30분도 지나기 전에 M16소총으로 무장한 '반독립과 민병대'가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투표 참패에 분노하며 독립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테러를 가했습다. 그들은 선거결과를 발표한 마고타호텔을 시작으로 동티모르 전역에서 주민들은 물론, 유엔 선거감시관계자와 각국의 언론인, 심지어는 카를로스 벨로 주교에 대한 무차별공격을 감행했습니다. 9월 9일 아침까지 약 4천여 명의 동티모르 주민들이 민병대와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서티모르로 추방됐습다 현재까지 학살된 동티모르인과 산과 정글로 도망친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오늘(10일) 감시단을 철수할 계획입니다.

### 유엔 등 책임 회피

유엔은 물론 각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의 식민지배를 용인, 공모하고 인권유린을 은폐,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이한 방법으로 독립투표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책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 역시 이 문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나선다면, 동티모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 학살과 추방을 멈추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입을 망설이고 있는 유엔과 미국 등 각국 정부를 움직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의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의 연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우리에게 남겨진 몫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티모르의 독립을 인정할 것과 그 평화적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동티모르인들을 보호하는 한편 민병대를 해산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속히 동티모르 문제에 관해 연대하고 한국 정부 등을 비롯 각국 정부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은 동티모르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티모르가 평화적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행사와 동정

-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1천일 기념행사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포스코 빌딩 앞  
주최 : 민주노총, 삼미특수강 고용특위(문의 02-2635-1133)
- 국가보안법 원전철폐를 위한 2차 국민대회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명동성당  
주최 : 국가보안법 원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
- 기획예산처의 2000년 사회보장예산안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  
일시 :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9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기획예산처 앞  
주관 : 참여연대 등(02-723-5300)
- 문예이카데미 특별강좌 '학생운동을 위한 사회진출 워크샵'  
일시 : 9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11시  
장소 : 민예총 문화아카데미 대강당  
주최 : 나우누리 찬우물, 민예총 문예정보화팀(문의 02-739-6854)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15일(수)

제 145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인권탄압 국가에 대한 국경없는 제재가 시급하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만큼 달리 교도소에의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총과 칼로 무장한 민병대가 달리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목이 잘린 시체와

팔이 잘린 어린이들이 즐비했고 부녀자들이 집단강간을 당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열흘간 동티모르에 머물면서 선거감시 운동에 참여하고 돌아온 천주교여성공동체의 변연식 씨는 동티모르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동티모르 민병대가 동티모르의 독립

을 반대하며 잔혹한 학살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한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민주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낮 12시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현 사태를 배후조정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규탄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인도네시아와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은 더 많은 무기판매를 위해 그간 학살을 방조해왔으며, 김대중 대통령 역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60억불 때문에 미국의 눈치만 보며 파병여부를 미루어왔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학살 중단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시민사회단체의 압력과 항의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인니에 대한 국제적 제재 촉구

또한 참가자들은 "동티모르의 현 참사는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방관과 무관심이 빚어낸 예고된 비극"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가 75년 신생독립국이었던 동티모르를 침공한 이후 지난 24년간 주민 20만명을 학살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민병대를 통해 다시금 대량 학살극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의 방관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러한 인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서는 국제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동티모르 독립의 승인 △군대 철수 △민병대의 해산과 학살주모자에 대한 국제재판 회부 등을 요구했으며,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 천주교 사제 단식에 신자들 동참

"제가 단식이나 삭발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에 대해 물어볼테고 저 역시 지금의 마음들을 잊지 못할거예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쁜 법'이라고 떠들며 살다보면 언젠가 국가보안법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집안의 장손인 탓에 지지단식과 삭발시위 동참이 쉽지 않았다는 조대원(28, 부천노동자목회) 씨. 그는 어제 민 머리가 어색한 듯 모자를 눌러썼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9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어느새 8일째. 신부들의 뜻을 이어 가톨릭노동자무국(회장 오우희) 등의 천주교 사회운동단체들 역시 지난 금요일부터 병동성당에 천막을 짓고 릴레이 지지단식에 들어갔다. 일주일씩 단체들이 번갈아가며 모두 쓰러질 때까지 이 투쟁에 임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결의.

"전두환 정권때 조작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살이를 했어야했죠.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울한 구속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지 단식 4일째를 맞는 권오광(42) 가톨릭노동자무국 집행위원장의 말이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내걸고 신부들에 이어 천주교 신도들까지 단식에 들어간다하자 주변에선 '정치적 문제에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병동성당까지 찾아와 격려해주는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각 지역 성당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어 10여명의 지지단식자들은 먹지 않아도 마냥 배가 부르단다.

매일 아침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염원을 담은 미사로 시작하는 이들은 이 법의 철폐를 위해 기꺼이 자신들이 그 메신저의 역할을 다하겠노라며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연다.

##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다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은 모두 허구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5% 증액한 4조 6천억원 선으로 합의한 사실이 밝혀져 노동·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들은 1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14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했다.

#### 실업대책예산, 오히려 축소

집회에 참가한 노동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2003년까지 '생산적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예산을 매년 10%이상 증가시켜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 예산은 현 예산을 불과 4.5% 증가시킨 것에 그쳐 '생산적 복지'제도 구축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는 생산적 복지의 실체가 의심될 정도로 복지부문에 대한 실제적 배려와 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짜여진 예산편성"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이 예산에는 내년 10월부터 도입,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역시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여성부문의 경우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69.7% 증가된 것이 사실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및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실직여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예산은 거의 마련되지 않아 예산인상에 따른 실제 증축율은 2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을 이유로 내년도 실업대책예산 30.5% 삭감했

다. 이에 대해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장은 "소득격차가 늘어나고 빈곤지수가 높아지는 마당에 실업대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실업자 방치대책마저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 더 많은 실업자 양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예산 재편성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을 벌여나 가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대통령이 약속한 '생산적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그 목표로 한다. 즉, 약 2백만명에 이르는 사회빈곤계층에 대한 생활기반을 확충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2003년까지 그 대상을 장애인,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확대시키는 한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혜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그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

#### 조중필 사건 제수사 촉구

####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대표 문대필)와 대학생 40여명은 14일 오후 2시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살해된 조중필(홍익대생, 당시 25세)씨 사건에 대한 제수사를 촉구했다.

김동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간사는 "조중필 씨 살해사건의 경우 당시 정황과 증거를 보아 유력한 용의자인 페터슨(미군속 자녀)과 에드워드

건 리(재미교포) 중 한명이 범인인 것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페터슨을 단순폭력죄를 기소하는 실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귀속돼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담당검사였던 박재호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 역시 이사건의 해결을 막는 장애가 됐다"고 비난했다.

고 조중필 씨의 모친 이복순 씨 역시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하는데 살인자는 거리를 활보하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조중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미군범죄가 뿌리 뽑혀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 초 동두천에서 시체로 발견된 이정숙 씨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세움터 대표 김현선 씨는 이정숙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 "담당검사에 대해 코리(이정숙 씨와 동거중, 남)가 이 씨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성문(의정부 지청) 검사는 코리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씨가 타살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리의 신빙확보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씨는 "올 초 명백한 타살이었던 신차금 씨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기지촌에서 여성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미군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염원한다면 국보법 신문 「할보」를 만나보십시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담당: 김정희)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16일(목)

제 145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국민회의 유선호 의원(인권위원장)은 15일 "현실적으로 야당과 자민권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만 현행 7조의 내용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고무·찬양·동조 등의 활동을 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천주교연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7조의 내용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7조에 의한 피해사례가 지금의 9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병모 변호사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원이 증거제출 요구 없이 검찰의 기소내용에만 의지해 판결하는 게 현실"이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돼 여전히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집권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편 천주교연대는 토론회에 앞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9일째 단식 중인 신부와 수도자 등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서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63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반민주인 사들은 이 땅을 떠나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그동안 각 지역 천주교 교구 등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

지 서명을 이반 정기국회 때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 발족식이 15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민예총, 사회진보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행동'은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울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협상이 시작될 WTO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쳐 OECD에서 논의가 중단된 다자간 투자협정이 다시 논의된다. 또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농산물협정·지적재산권 등 우루과이라운드 때 일차적으로 합의됐던 내용들이 초국적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될 것이 예측돼 사회운동단체들의 반대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중행동은 포괄적 무역협상을 기조로 하는 밀레니엄라운드에 반대하는 서명에 전세계 80여개국에서 1천2백5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주세까지 간섭하려는 음모

이날 민중행동 발족식에 참석한 민주

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무역기구(WTO)는 한국의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소주의 세율까지 간섭하며 민중의 삶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이후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가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김진균 교수(사회진보연대 대표) 또한 "최근의 투자협정들은 초국적 금융자본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며 "이는 환경·산업안전·노동자 보호·인권 등의 기준들을 강그리 무시하는 야만적인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택희의, 밀레니엄라운드 다뤄

이처럼 투자협정과 WTO밀레니엄라운드에 대한 문제점이 시민사회로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반해,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아펙정상회담에서도 밀레니엄라운드 협상이 주요 의제였으며 아펙 회원국들이 밀레니엄라운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씨가 전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투기자본의 규제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자본 투자로 인정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족식을 마친 민중행동은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금융거래과세 및 초국적금융자본 통제 △외채감감·민중재분배를 행동의제로 채택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밀레니엄라운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15일 성공회대성당에서는 사회 복지시설내 불임수술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는 2백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강제불임은 저자생존의 명분으로 우생학에 토대를 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불임수술은 논의의 주제조차 될 수 없는 반윤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부모와 시설, 국가 등에 의한 불임수술은 출산에 예상되는 불만을 예방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본인의 동의없는 강제 불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임성만 장애인복지개발원(정신지체인 재활시설) 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의 문제를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이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해오지 못했다"며 "불임수술의 모든 책임을 가족과 시설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에 대한 통제와 육성 등에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책 미흡이 불임수술 원인

공청회 자리에는 정신지체인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14살난 정신지체인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서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면 부모는 만사를 제쳐놓고 생리대를 들고 학교로 뛰어가야 합니다. 딸은 아무리 타일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런 딸이 아이를 갖게 된다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임수술 여부를 놓고 부모를 욕하지만,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준다면 우리 역시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시 한번 병신으로 만들고 싶겠습니까"라며 무책임한 국가의 장애인 대책을 질

타했다. 또한 아들이 정신지체 1급이라는 임영옥 씨도 "지난 6년 동안 아들의 취직을 위해 직업도 버린 채 뛰어들었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없고 정부의 대책마련 약속도 모두 허구였다"며 "언제나 되야 실효성있는 정부대책이 나오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공청회는 장애인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학문적 조망에 그쳐, 이번 공청회 역시 이전 공청회와 별반 다르지 못했다. 이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의해 또

다시 고소당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감금된 바 있던 이대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 공무원 1명을 특수감금, 강제노역 등의 혐의로 13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양부와의 불화로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돼 생활하던 중 생명불상의 남자들에 의해 자강원으로 끌려가 강제 구금되었다"며 "직원들로부터 몽둥이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탈출을 시도하던 중 대퇴부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불구로 살게 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강원 입퇴소 절차를 밟은 적이 없으나 공문서에는 경찰서에서 자강원으로 인계해 심의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시 담당공무원도 함께 고소했다. 자강원은 지난해 양지마을 실상 공개 시 인권유린의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바 있어, 이번 고소로 자강원의 실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 국정원 약물수사 의혹

###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소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된 하영옥 씨가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약물을 섞은 음료수를 제공받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씨는 또 고문의 일종인 밤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씨는 지난 4일 이정택 변호사와 접견하던 중 "처음엔 조직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 시작 후 5-6일쯤 지난 뒤, 수사관들이 준 박카스를 마시고 나자 기분이 고양되고 배가 좀 아팠고 그후 자백하게 됐다"며 "박카스에 무슨 약을 넣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하 씨는 15일 강금실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배가 아프다고 말하기도 전에 수사관이 먼저 '배가 아프지 않냐?'고 물어 와 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약물투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며, 강 변호사도 "하 씨가 밤샘수사를 받은 뒤 박카스를 복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안기부 시절에도 피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자백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된 백태웅 씨는 1심 공판 당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약물투여다. 밥을 먹고 나면 잠시 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비증세가 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해서 증요수사가 있을 때에는 아예 밥을 먹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기도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명섭 씨도 음식물에 약물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백 씨 등이 주장이 '의혹'에 그치고 말았듯이, 하 씨의 주장도 영원한 의혹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17일(금)

제 14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 민화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를 부탁한다." 이른바 '죄의' 인사의 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16일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광옥) 주최로 열린 '국가보안법과 남북대화'라는 정책토론회에서 20년 간 보수적 통일운동을 해왔다는 이석치 통일안보협의회 회장은 수배된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자신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아들이 학생회 활동을 해왔다"며 "경찰이 새벽마다 식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집 앞에서 감시를 하는 등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든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보수적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경남 동화연구소장은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들은 결국 김일성 배지 달고 인공기 새겨진 티셔츠 입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도 맘껏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주장하는게 아니냐"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또한 장수근 한국자유총연맹 연구실장은 "국보법이 폐지되면 곧바로 공산당 활동을 정당화하거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씨는 국보법 개정에 대해 "국보법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명칭은 유지하고, 7조 및 10조의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맞게 구체화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유선호 의원은 "남북교류의 급성장으로 북을 적

대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심지어 UN에서도 국보법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상태며, 현재 정부는 민간 교류와 통일운동을 억압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 동티모르 즉각파병 촉구

#### 국내 34개 시민단체

민주개혁국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동티모르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조속히 파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동티모

르에서는 학살이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국경을 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지체없는 평화유지군 파병으로 동티모르인들의 생명과 인권, 민족자결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명분이나 실리를 내세워 파병을 지연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이며 인도네시아군과 민병대의 학살을 방조한 공범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파병은 물론 식량과 의료품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나서 동티모르의 평화유지에 앞장서는 한편 국제법정을 설치해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범죄를 조사하고 학살범을 처벌하는데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동티모르의 평화 정착을 위한 목요기도회'를 열고 조속한 평화유지군의 파병과 민병대의 무장해제, 인도네시아 군의 철수 등을 거듭 촉구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특별  
기고

##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이성훈(파스코마나 사무국장)

요즘 언론과 인권 NGO(민간단체)의 최고 관심사는 동티모르다. NGO의 성명서 발표와 시위, 김대중 대통령의 동티모르 관련 발언, 파병을 둘러싼 논쟁... 일찍 70년대 초, 월남전 파병을 둘러싼 대논쟁을 연상케 한다.

사실 동티모르 문제는 요즘 국제정치와 국제인권운동의 최대 화두임이 분명하다. 코소보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반쪽 '실패' 또는 반쪽 '성공'인데 반해 동티모르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대의 명분과 우호적인 국제정치적 환경속에 진행되고 있다. 비록 희생은 컸지만 동티모르 민중의 자결권 획득과 독립은 이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이다. 한편에서는 지금까지 국제정치를 지배하던 현실정치 논리에 대한 '인권정치'의 역사적 승리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국제적 압력속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평화유지군을 반기로 결정하자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며 동티모르 문제를 외면하던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사를 천명했다. 사실 벨로 주교와 함께 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독립운동 지도자 조세 라 모스 호르타 씨가 작년 8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그의 면담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던 정부가 새롭게 '국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했는지 지금은 파병, 그것도 인명의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전투병력 파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현실변화다.

### 국익 계산에 따른 파병

한편 명동성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신부들의 단식이 10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인권 NGO와 국회에서도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찍 보기엔 전혀 성질이 다른 두 이슈이지만 필자는 두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 동티모르의 비극은 식민제국주

의의 산물이지만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트 독재정권을 지탱해준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국가보안법의 결과이다. 국가보안법은 엄밀히 '정권보안법'에 불과하다. 전세계 비민주, 독재국가에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군사정권의 성격이 강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보다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심각하다. 75년 동티모르에 대한 무력침공 이후 숭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해 준 것은 바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 즉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안보가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동티모르 사태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인권, 인도주의 등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국의 군대를 자국 땅에 불러올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및 인권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제적인 '인권대통령' 이미지가 보여주듯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가 개인적인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수단이나 국내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될지의 여부는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달려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어정쩡한 타협과 절충이 아닌 인간안보로 한걸음 나설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신장을 이끌어 가는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의 동티모르 파병결정의 주된 배경은 유엔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동티모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유엔의 입장을 생

각할 때 필자는 파병을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엔 요청을 받아들임에 있어 자의적이고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이중잣대의 적용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92년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구조적 뿌리라며 '단계적 철폐'를 권고했고, 95년 의 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해 인권상황을 조사한 후 '국가보안법 철폐'를 권고했다. 벌써 오래된 얘기다. 동티모르 파병이 경제위기 하에 큰 규모의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과 몇일만에 결정한 것에 비한다면 또 다시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의 발상전환이 필요할 뿐, 예산은 커녕 오히려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경제적 이득과 '인권선진국'으로서의 '국위선양'의 이미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유엔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한국은 92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유엔의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지난 4년간 한국정부는 '도덕적 헤이'에 빠져 있었거나 위협행위를 했다. 이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 전형적인 '인권후진국'의 행태이다.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의 요청에 따른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의 따른 것이라면 같은 논리로 국내의 국가보안법 철폐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티모르 문제의 원인인 인도네시아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정부의 인권외교는 아무리 명분이 좋아해도 반쪽의 성공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tworld.net/~rights

1999년 9월 18일(토)

제 14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계속되는 학살

###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유엔평화유지군의 파병 결의에도 불구하고 학살은 계속되고 있다”

15일 현재 호주, 미국 등 15개국이 동티모르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에서의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 독립적 소식원을 가지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16일 “쿠판, 아탐부아 등 난민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티모르 지역에 민병대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난민 살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히 타바레스가 이끄는 민병대는 민병대원들에게 총기를 공급하고 있어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호주에서 활동하는 동티모르인권센터 역시 지난 12일 “민병대 총무목 타바레스와 부무목 구테레스가 서티모르에 출현했다”고 전해 이들의 주도하에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대규모의 학살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민병대가 동티모르를 떠나고 있다는 보도는 동티모르의 상황이 진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민병대가 서티모르에 몰려가 그곳에 있는 난민을 대상으로 유혈극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동티모르는 물론 서티모르에 있는 난민들이 무사히 귀환할 때까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구호단체의 조사단 파견과 현장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티모르에는 약 14만명의 동티모르인들이 피난 또는 추방되어 있는데 이 수는 인권단체들의 조사에 의

하면, 유엔 안보리의 평화유지군 파병 결의 이후에도 하루 1만명 팔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아팩회의를\* 마치고 호주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교민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호주운동본부(대표 배기홍,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스 주의 수상 등이 김 대통령과의 오찬을 준비한 인 시드니 달링 하비킨벤션 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

파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교포와 호주 현지 주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국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에 의해 희생된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지 않는 한 김 대통령은 진정한 국민 정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지난 8·15 사면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호주 언론이 김 대통령의 방문을 대하는 태도가 3년 전 야당 총재 시절에 방문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냉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총재 시절 이곳 언론이 김 대통령을 인권운동가 또는 민주주의의 선도자라고 칭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호주를 방문했다’라는 보도만 내보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운동본부의 신준식 사무국장은 “김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리해고와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인권탄압을 자행해왔던 것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실망과 배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 행사와 동정

-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대회  
일시 : 9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주최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회 (02-777-0600)
- ◇ 파트타임 노동자의 보호와 조직화를 위한 정책포럼  
일시 : 9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02-393-1457)
- ◇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치수배해제 촉구 법회  
일시 : 9월 18일(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조계사 대웅전 및 주변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불교연대(준) (016-429-3254)
-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창립대회  
일시 : 9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준) (담당 김정희 02-741-5363)

## 생존보단 월드컵이 우선

###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주민들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신축으로 인한 강제철거 도중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17일 새벽 6시쯤, 상암 20구 지역에 천보용역원 80여명이 들이닥쳐 이영자 씨 등 주민과 학생 6명이 부상을 당했다.

철거용역원들의 돌팔매와 주먹질에 주민 이영자 씨는 척추를 다쳐 목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김만기 씨는 이가

깨지고 갈비뼈를 심하게 다쳤다. 그밖에 이가 나가거나, 이마가 찢어져 수술한 주민이 둘 있고, 대다수 주민은 목과 팔 등이 뜯기는 상처를 입었다.

김대수(상암 철거대책위 위원장) 씨는 “철거용역원들이 가져 온 돌을 던지면서 주민들 얼굴을 짓이겨, 10여분 만에 지역을 장악했다. 주민들을 몰아놓고 구둑발로 찍어누르는데, 악을 먹

## “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

### 아들에 이어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

“무슨 일을 있더라도 진상을 밝힐 겁니다. 나도, 우리 아들도 억울해서 도저히 살수가 없어요. 사고만으로도 억울한데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되다니요” 흥분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계속 높아지던 목소리는 결국 울음으로 변했다. ‘진행성 근이양증’의 장애를 가진 대학생의 어머니, 조부용(43) 씨.

걸을 수 없는 아들을 등에 업고 등하교를 시키던 조 씨는 지난 7월 학교에서 아들을 집에 데려오다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무면허의 10대. 이 사고로 조 씨와 아들 박재찬(20) 씨는 각각 전치 10주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조 씨는 무릎인대가 끊겨 나가 본인도 장애인이 되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 씨가 정말 분노했던 건 이후 가해자와 병원,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태도 때문.

가해자는 병원비에 반도 못 미치는 공탁금만 걸어놓은 채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이 언론 등에 공개되자 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 역시 이들의 치료비가 보험료 지불 한도를 넘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아들 박 씨를 강제 퇴원시켰다. 사건 해결을 맡은 화성경찰서측 역시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라는 조 씨의 진술을 조사에 기록하지 않았다. 결국 조 씨는 경찰청에 진정을 넣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경찰청 민원담당은 조 씨를 더욱 분노케 했다.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조 씨에게 경찰청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조사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병원에서 와서 한다는 말이, “아줌마가 진짜 억울하면 검찰에 찾아가서 말해요. 그러고도 안되면 관사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가하게 누워있을 땐 줄 알아요”라는 억장 무너지는 말뿐이었다.

사건을 조사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준민 간사는 “당시 가해자를 치료했던 의료진들도 ‘술 냄새가 코를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시 가해자의 병원기록을 살펴보면 음주와 관련한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경찰은 이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요즘, 조 씨를 더욱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늘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휠체어 등을 팔려는 업체들이 하루에도 몇 통씩 전화를 걸어오는 것.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고 해도 아픈 사람위로는 못해줄 망정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경찰을 비롯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지 않고서 어떻게 지 어미뵈 되는 사람들을 치겠냐?”며 분개했다.

### 주민폭행에 경찰, ‘나 몰라라’

주민 천명희 씨는 “폭행이 계속되는데도 마포경찰서 소속 정보과 형사들과 전경 2개 중대는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부상자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119조차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포경찰서 정보과 임윤호 씨는 “주민들이 쇠파이프와 돌을 먼저 던져서” 폭력사태가 야기됐으며, “천보가 7시 철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났었다.”고 주장했다. 철거 투쟁에 합류했던 연세대 학생 20여명은 귀가 중 가좌역에서 철거폭력을 알리다가 이중 11명이 서부경찰서에 연행됐다.

천보용역은 빈집 13가구를 철거하고 오전 10시 철수했다. 현재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세입자 16세대의 요구안은 가수용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지만, 시공사인 도시개발공사는 ‘가수용시설은 불이 날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대수씨는 난지도에서 ‘파리떼가 몰려드는 밥을 먹고 20년을 살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다고 나가라 나가기가 막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아 멀리서는 푸른 산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검은 침출수가 흐르고 땅을 조금만 파면 가스가 나온다고 한다.

## 국보법, 입장이 됩니까?

###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 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공동대표 리수현 신부)는 17일 김 대통령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김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21일(화)

제 146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1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가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창립대회 및 1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 8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에 연대기구 구성이 제안된 결과, 이날 현재 1백1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본지 9월 2일자 참조>

국민연대는 강만길, 리영희, 한완상, 변형윤 씨 등 사회원로 18인을 교문으로 위촉하고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씨 등 13인의 상임대표와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변호사 등 5인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고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 신문 「활보」(창간호 9월 20일)를 제작·배포하고 있는 국민연대는 앞으로 법학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설문조사와 자료집 발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교육 등을 기획중이다. 또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집중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향후 조직 및 활동을 제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연대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지난해말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게 국보법 7조 삭제제를 권고한 이후 인권구현의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이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과 활발한 남북경협 하에서도 적화통일의 위업을 들먹이는 냉전수구세력의 작태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7조는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로, 국민의 자기결정을 강요하는 불

정상치였고, 국보법 구속자중 95%가 7조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7조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 검찰 "7조만은 안된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

표) 씨는 "7조는 검찰이 대체입법을 통해서라도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다. 국민연대는 7조 폐지를 목표로 삼는 모든 단체의 참여가 가능하고, 연대기구 밖에서 개성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라고 밝히며 폭넓은 대중운동으로서의 국민연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리영희 한양대 교수는 기념사에서 "최고강령만을 주장할 때 운동은 패배를 경험하기 쉽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권을 갖고 있는 수구세력의 힘을 평가해보면 7조 폐지는 이성적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평했다.

#### 새로운 책

### 『국제인권법』

박찬운지음/ 한울아카데미/ 3만원/ 455쪽

"외국의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은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하나의 법체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권이라는 개념의 인식부족으로 두 법을 분리해석, 적용하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법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법처럼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박찬운 변호사가 펴낸 『국제인권법』은 국제인권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국제인권조약을 둘러싼 논쟁 등을 알기 쉽고도 다채롭게 소개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국제형사재판소와 '개발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에 대한 참고 자료를 비롯해 국제인권기구의 인터넷 웹 사이트 주소도 첨부.

그러나 이 책은 국제인권법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선뜻 내리지 않는다. 대신 여성학, 피노체트 재판, 양지마을 사건 등 몇 가지 사례와 질문을 던져 독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본문 중간과 책 끝머리에 각각 내용과 관련된 직접자료와 간접자료를 원문 그대로 배치해 놓은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만약 한 나라의 독재자와 그의 추종자가 그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종족에 대해 인종차별정책을 취하거나 그 종족을 집단 살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권이란 개념으로 명확한 답이면서도 주권이란 문제 속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질문을 통해 필자는 다시 한번 국제인권법에 대한 공부의 필요함을 강조한다. (구입문의 02-326-0095)

인권  
시평

##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1996년 1월 어느날 새벽 세 명의 영국여성들은 곧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전투기 호크(Hawk)가 있는 랭카셔의 무기창고로 몰래 들어가 한시간 반동안 가정용 작은 망치로 그 전투기 조종석의 컴퓨터 장치를 두들겨 부숴냈다. 자신들이 만든 비디오는 조종석에 올려놓았고, 무참히 살해당한 동티모르 사람들의 사진을 비행기에 붙여 놓았다. 그리고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그들은 서로 얼싸안고 새벽까지 춤을 추었다. 이 전투기 파괴사건은 1980년대 이후 평화,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시작된 '무기를 보습으로', 즉 무기해체운동(The Ploughshares Movement)의 하나로 매우 주목받았던 사건이다.

내가 태평양의 작은 섬 동티모르에서 벌어진 일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3년 전 바로 그 비디오를 통해서였다. 영국기자가 찍은 인도네시아 군인들의 발포, 도망가는 사람들,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 비디오 중간중간 삽입되었다. '당신들이 진정 인간이라면 제발 사람 죽이는 일은 당장 그만두세요'라는 한 소녀의 울먹임과 함께 자신들이 망치를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한 교백도 담겨 있었다. 인간에 대한 폭력에 저항해 사용한 그들의 폭력은 바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역설적 교백이었다.

현장체포되어 수감중인 그들에게 "당신들의 께어있는 용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편지를 썼다. 그들은 "무고한 삶이 이유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와 같다. 무기산업의 고용창출만을 말하는 정부에 항의편지 쓰기, 수차례의 무기회사방문,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 거리시위등. 우리가 사용한 '폭력'은 마지막 수단이었다"며 긴 답장을 보내왔다.

수감 7개월 후의 1심 재판에서 놀랍게도 이들은 무죄로 석방되었다. 동티모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론 피고석에 앉아있던 그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들이 체포될 당시만 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언론들도 일제히 이들의 석방을 돕기사로 다투었다. 이 사건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보았다. 주제는 이들이 사용한 폭력. '어쨌든 폭력은 나쁘다'며 한 방청객이 반박했다. 멤버의 한 사람으로 나온 안젤라는 "폭력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에만 성립되며, 인간을 죽이는 기계에 대해서는 성립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받아쳤다. 이 사건은 동티모르에 대한 영국사회의 관심에 불을 지폈다. 그들의 용기의 뿌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임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삶과 운동의 대전제임을 다시 들어켜본다.

밀린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문의: 이창조(02-741-5363)

## 주간인권흐름

(99년 9월 14일-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는 시위 개최(1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심포지엄 개최(15일)

2. 이번엔 말 좀 들어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의의 사전심의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16일)

3.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했던 얘긴데...  
정부, 연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영장없는 긴급감청 가능시간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혀(17일)

4. 공습경보! 밀레니엄라운드가 다가온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투자협정 및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발족(15일)/ 전세계 87개국 1천1백개 단체,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세계무역기구의 시스템과 절차들이 세계 대다수의 민중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밀레니엄라운드 무역자유화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적 청원운동 시작(15일)

5. 4·3의 진실 규명되려나?  
국민회의 추미에 의원, 제주 4·3사건 당시 체포돼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사 1천6백50여명의 명단과 일반민간인 1천3백21명의 재판기록 공개(15일)

6. '축제'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군!  
삼성 등 국내 30대 기업 대다수가 장애인 2% 고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18일)

7. 월드컵이 뭐길래?  
상암동 월드컵 부지 강제철거 진행, 주민들 대다수가 돌팔매와 주먹질을 자행한 용역원들에 의해 부상(17일)

8. 동티모르에 다국적군 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파병 승인(13일)/ 다국적군 2천5백명 동티모르에 도착(20일)/ 한국 정부, 동티모르 평화군 파병 방침 결정(14일)

9. 그럼 국가는 뭐하나?  
정부, 국립대학 완전 민영화 방안 검토(16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22일(수)

제 146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의료비가 너무 비싸 병원도 찾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운영위원장 최의팔 목사, 의료조합)이 21일 발족했다. 이날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조합 창립식에는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 흥창의 전 서울대 병원장과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가했다.

의료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5천만원을 설립기금으로 삼고, 외국인 노동자가 매월 5천원씩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의료조합에 가입하면 1백여개의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차 의료기관의 경우 60-70%, 3차 의료기관에서 50%의 진료비를 돌려받게 돼 치료비 수준이 내국인과 비슷하게 된다. 의료조합은 기금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의료비 지원금을 최고 4백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폐렴 등으로 죽어가는 외국인노동자

이날 발족식과 함께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의료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의료조합의 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심포지엄 발제자로 나선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의 양혜우 씨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바쁜 일정으로 인해 병원에 갈 짬조차 낼 수 없으며 혹여 걸근이라도 할 때면 많은 액수의 수당이 공제돼 외국인노동자들이 병원에 가질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과다한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결핵, 폐렴 등의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를 포기한 채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10일간 입원하였을 경우 지불해야할 병원비는 보통 외국인노동자의 10개월 임금에 해당한다.

####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따라서 인천사랑병원 원장 이왕준 씨는 "현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등에서 자신 의료기관과 연계해 이들에 대한 치료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단일하고 조직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전문적 협력 의료기관을 둔 형태의 의료공제조합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공제조합의 창립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의료현실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현재 조합 운영비가 5천만원에 불과해 15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하기란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의료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합운영비의 확충을 비롯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료

기관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 특히 그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의료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제가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웃로비 의혹 사건에만 적용 가능한 한시적·제한적 특검제로 제정되자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검제 실시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검사의 권한 등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찰 등 관계기관이 정작 협조를 어겼을 경우 이를 제재하고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 독자 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김건환 건국대 교수

우리 동네 경기도 광주에 8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군청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6명의 주민대표가 주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우리 집집 군수를 만났다. 박종진 군수는 주민들이 낯익은 진정서 용지들을 뒤적여 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언짢은 듯한 어조로 때로는 격양된 어조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군수의 핵심설명은 '다이옥신 피해에 대해 요즘은 사회에서 별로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완벽한 소각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30대 주민 한 사람이 군수의 말을 받아 말했다. "군수님,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다이옥신 피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무 피해가 없는 시설이라면 군수님이 사시는 동네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기본이 언짢을 수 있는 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말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주 오갔던 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군수는 얼굴표정이 무섭게 험악해지면서 큰소리로 화를 냈다. 그리고 불호령이 떨어졌다. "저놈은 밖으로 끌어내!" 뒤에 서있던 군청 간부들이 즉시 그를 끌어내려고 했다. 무서웠다. 군수가 주민에게 "저놈"이라니,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 소각장 건설 항의에 "저 놈 끌어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군수에게 항의하였다. 어떻게 군수가 주민에게 이럴 수 있는나고. 그때 군수는 나를 향해 반말투로 거칠게 말했다. "당신은 뭐야? 뭐하는 사람이야?" 난 대답하지 않았다. "교수입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크게 기세 등등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이미 신상조사를 다 끝마쳤다는 듯이... "교수, 교수면 다야? 똑똑이 해!" 군수는 나에게 계속 위협적으로 호통을 치고 있었다. 나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군수는 소리쳤다. "저 두놈을 밖으로 끌어내!" 군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몇 사람이 내게 달려들었고 억센 손아귀가 내 허대의 뒷부분을 낚아챘다. 결국 난 내 자리에서 방 출입구까지 질질 끌려가며 버둥대야만 했다. 아무도 감히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머리털 나고 처음 당한 일이었다. 무서웠다. 더 심한 봉변을 당할 것만 같았다.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관은 정말 백성에게 폭력으로 위협을 주어도 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백성은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는가?"

밀린 구독료 납부 바랍니다.

문의: 이창조(02-741-5363)

## 인권 회복에 명철도 있었다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민족 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는 이미 빛이 바랜 대로 바래있었다. 오늘로 3백23일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소속의 어머니, 아버지들... 평균 60대인 이들은 10여 평의 천막에서 지난해 초겨울에 농성을 시작해 4개월 한 바퀴를 이곳에서 다 돌았다.

"작년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만 농성을 할 생각이었죠. 이렇게 오래 끌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치권의 논의가 몇 번씩 바뀌는 동안 속이 다 타 버렸어요"라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 배은심 회장. 이번 추석에도 농성장을 지키겠다는 유가족들은 지금 국회 법사위와 행자위에 계류 중인 두 법이 제정 될 까지는 농성을 풀 수 없다며 쓴웃음을 짓는다.

### 두 번째 조계사에서 지낸 차례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한총련 수배 학생들의 품경도 다를 바 없다. 어느새 4백9일로 치닫는 농성이지만 수배학생들은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대웅전 마당을 쓸고 108배를 올린다. 이들은 추석을 앞두고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수배자가족협의회, 유가협 등과 지난 19일 합동차례도 지냈다. 조계사에서 지내는 추석 차례도 어느새 두번째. 조계사 생활이 3개월째라는 최선희(수배 3년)씨는 "명절날 이렇게라도 가족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밝게 웃지만, 지척에 둔 집에 벌써 몇 년째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서럽기만하다.

### 귀향보다는 추석농성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기도에 돌입한지 오늘로 16일째를 맞았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사발단식농성에는 평신도단체인 가톨릭 전국사목협의회, 예수삼이공동체 등 천주교 단체 회원들의 릴레이 지지단식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매일 오후 8시 단식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를 열기도 한다. 추석 명절이라고해서 이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제단의 바로 옆 천막에는 범민련과 전국연합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귀향이 아닌 추석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후에 <명동성당 한가위 한마당>을 열고 추석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이들과 함께 명절의 훈훈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이처럼 인권피해자들의 농성이 추석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어서 올 추석 역시 풍성한 명절이기보다 본인들은 물론, 가족들과 친지들의 마음이 허전한 명절일 듯 싶다.

정겨운 추석 보내세요. 하루소식은 28일자부터 다시 발행됩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28일(화)

제 14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4개 교단 "국보법 폐지" 목청

###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교단의 종교지도자와 신도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저녁 7시 명동성당 입구에는 수녀장상연합회 소속 수녀 2백여 명 등 4백여 명의 종교인들이 모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열고 국보법 폐지운동의 열기를 드높였다. 그 동안 교단별로 각각 진행되어 오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범종교계 차원의 단일한 기치 아래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집회는 21일째 단식기도를 진행 중인 천주교 사제단의 보고로 시작했다. 단식단 가운데 문정현 신부가 지난 24일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사제단은 "단식기도회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였다. 이어 연설에 나선 홍근수 목사, 청화 스님, 정성길 교무 등 각 교단 종교지도자들도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참석자들도 결의문을 통해 "여러 교단의 종교인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민족의 해원과 상생,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악법을 폐지하고 정의의 법을 세우는 행진에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각자의 신앙을 넘어 민족과 인권을 세우는 공동선"이라며 연대투쟁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촛불시위에 돌세례

한편,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명동성당을 나와 촛불행진을 시도하자, 전경들이 이를 강력히 제지하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부경찰서 보안과 소속 사복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져 시위대열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철거위협에 떠는 오전동

일터·보금자리 모두 잃을듯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상공지역(상가와 공단이 모인 지역)의 주민들이 철거위협 속에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이 이주하고 3가구가 남아 있는 오전동 상공지역에는 현재 철거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단 한 채의 건물이 남아 있다. 3가구 주민들은 이 건물에서 숙식하며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에 따르면, 27일 경기환경 소속 용역원 7-8명이 건물 철거를 위협하고 있으며, 건물 근처에 용역원 3명이 상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언제 철거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이라고 주민들은 전했다.

주민 김선자(식당업, 39세) 씨는 "시청은 보상금 6백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가게와 방을 구하겠어요? 이긴 생존권 싸움이에요. 쫓겨나면 여기에 텐트라도 치고 끝까지 싸울거예요"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지역에서 권리금 6백만원에 식당을 운영하며,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아이들 셋과 함께 생활해 왔다. 김 씨는 "용역원들의 위협이 커져 세 가구 모두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긴 채, 친척들이 가져다주는 쌀과 반찬, 이웃주민들이 가져다주는 현웃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철거위협에 맞서 27일부터 한 달간 의왕시청 앞에서 주변 오전동, 내손동, 유진상가 주민들과 공동으로 집회를 가칠 계획이다.

## 주요공판안내

▶ 9월 28일(화)

김홍신(명예훼손 등) 서울지법 319호, 형사23부, 오후 2시, 속형

▶ 9월 30일(목)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서울지법 317호, 형사3단독, 오후 5시, 속형

## <알림> 동티모르 민중 지원을 위한 모금

독립투표 이후 민병대의 폭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동티모르 민중들을 돕기 위해 국내에서 모금운동이 진행중입니다. 모금액은 호주내 동티모르 지원단체인 '티모르 에이드'를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금이 국제기구의 손이 닿지 않는 동티모르 민중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티모르 에이드를 전달책으로 선택했습니다. 약 1백원의 액수로 동티모르인 1명이 하루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금 계좌: 한빛은행 112-07-226022(예금주: 이주영-동티모르)

◎문의: 국제민주연대 최재훈(02-723-4255)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02-741-5363)

인권  
시평

##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분명히 밝히거나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나의 전술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치면서 끝까지 싸우자!"가 결코 아니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책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지로 이끌기 위한 '치명상'을 입힐 책무를 지고 있다. 나는 국가보안법의 급소인 7조를 똑바로 겨냥하면서 국가보안법에 건곤일척의 치명타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 아다시피 국가보안법 7조는 '적'(반국가단체)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단체(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오래 전부터 자의적인 법 집행과 남용을 가능케 하는 전형적인 '고무줄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조항은 공안세력이 실적을 올리기에 더없이 편리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국민 입장에서서는 언제 자기에게 불똥이 떨어질 모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조항인 것이다. 경찰관의 횡포에 "우리 법이 빨갱이 법만도 못하다"고 혐의하다 구속된 사람, '태백산맥'이라는 책을 썼다고 잡혀간 소설가, 대학 교재를 뼈뺌하게 썼다고 잡혀간 교수들... 이러니 술집에서 말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7조는 국가보안법의 여타 조항과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여타 조항들이 한결같이 북한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있음에 비해 이 7조는 '내부의 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모든 사람들 중 7조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95%선을 오르내린다는 사실이다.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남용을 없앴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되풀이 되었지만 언제나 불가능한 거짓말이었다. 95%선이라는 비율은 5공화국 때나 김대중 정권 하에서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우리는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겨냥해서 존재하는 법인지...

작년 말, UN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사실상 국가보안법 7조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세력이 끝까지 남기려고 도모하는 조항이 바로 7조임이 드러나 있다. 7조 폐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절망적이라 만큼 어렵다. 7조야말로 객관적으로 이번 국가보안법 싸움의 가장 뜨거운 결전장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지점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7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우선적 청산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 반대 주장은 진정한 국가보안법의 정체를 보지 못하는 허술한 운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폐지!"는 당연히 옳다. 그러나 그것은 과제이지 전술이 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우리의 전술은 "폐지"가 아니라 "7조 폐지"라야 한다.

##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난민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의도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접수는 물자 낭비"

지난 9월 초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양천구 목동 소재)를 방문한 이라크 쿠르드족 부한 모하메드 씨는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키기 위해 힘든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담당 공무원이 몇마디 간단히 물어보더니 무조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서를 작성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 이에 모하메드 씨와 동행했던 강금실 변호사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이곳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들을 일차적으로 거르고 있다"며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모두 거부했다. 한 시간에 걸친 실랑이는 결국 강 변호사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모하메드 씨에 대한 난민지위신청을 요청해왔다"는 사실을 밝히자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모하메드 씨의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났다.

강 변호사는 "변호사와 동행한 경우가 이 정도인데 외국인 혼자 간다면 신청서 작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난민여부는 난민인정협의회에서 판단할 일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판단해 난민지위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에도 한 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측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12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물적, 인적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난민신청대상자를 일차적으로 거를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난민지위신청 절차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채 국내에서 강제추방 될 위기에 놓여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 인권연대, 10월 한 달간 집중 캠페인

“경찰폭력, 시민의 힘으로 뿌리뽑자” 끊임이 없는 경찰폭력의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 10월 한 달동안 진행된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연대)와 인권운동대학생연대(학생연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경찰청 앞 항의집회와 토론회 등 집중적인 경찰폭력 근절 캠페인을 갖기로 했다.

이는 올해 들어서도 거리와 학교주변에서 불법 불심검문이 계속되고 현대중기노조 및 최춘마을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용의자 검거 시 총기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권연대 상담실장 고상만(30) 씨는 “경찰은 국민과 최일선에서 맞대응하는 공권력으로,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두려운 존재”라며 “10월 캠페인을 통해 한국의 경찰이 민주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는 친근한 이웃 같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권연대와 학생연대는 10월 1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캠페인 선포식 및 퍼포먼스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캠페인 기간동안 24시간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집단 고소고발과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11일 종로성당에서 변호사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토론회를 열고 올 한해 동안 발생한 대표적인 경찰폭력 사례 등을 되짚어 보며 경찰폭력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인권연대는 교도소와 검찰 내 폭력근절 캠페인도 계획중이다. (캠페인 문의 02-749-9004)

### - 경찰폭력근절을 위한 인권 캠페인 일정 안내 -

- ◆ 「경찰폭력 근절 및 개혁 촉구 인권 캠페인 선포식」 및 퍼포먼스  
때 : 10월 1일 (금) 13:00-15:30 / 장소: 서대문구 경찰청 앞
- ◆ 경찰폭력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근절방안 토론회  
때 : 10월 11일 (월) 14:00-17:00 / 장소: 종로성당 3층 강당
- ◆ <경찰폭력 인권유린> 일선 파출소 규탄 항의집회  
때 : 10월 13일 (금) 13:00-15:30
- ◆ 경찰폭력 근절과 피해자를 위한 목요 기도회  
때 : 10월 14일 (목) 19:00-21:00 / 장소: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 ◆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교육 촉구를 위한 경찰청 항의집회  
때 : 10월 20일 (수) 14:00-16:00 / 장소: 서대문 경찰청 앞
- ◆ 경찰폭력 근절 촉구 성명서 발표  
때 : 10월 21일 (목) / 각계 시민·사회·인권단체
- ◆ 경찰폭력에 의한 각종 피해에 대한 집단 고소·고발사업  
때 : 10월 29일 (금) /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행위 집단 고소·고발

1999년 9월 29일(수)

제 146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2백61개 종교 사회 단체가 28일 명동성당에 모여 「국가보안법폐지 연대회의(국보법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주교연대와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국보법 연대회의는 전국연합 주도의 범국민행동연대와 민권공대 위 주도의 범국민투쟁본부, 공동투쟁위원회 등 3개 연대기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확대 된 것이다.

7일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22일째 단식중인 문규현 신부는 “국보법의 폐지를 위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시작한 사발단식농성이 국보법 연대회의를 통해 대중투쟁으로 확산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 역시 “지금 시기는 노동자들도 함께 국보법철폐 투쟁에 나선 때”라며 국보법 폐지운동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국보법폐지 연대회의는 10월 2일을 ‘제1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집회 및 행진을 대학로 등 전국 각처에서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유와 평등이 넘쳐 흐르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싶어요’란 부제로 열리며, 범국민 결의대회와 평화행진, 촛불행사를 열린 예정이다. 또한 10월 16일, 30일을 제2, 3차의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인 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보법 7조 삭제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국보법 반대 국민연대」의 관계설정 문제와 관련 문 신부는 “운동에 있어서는 개정과 폐지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애인 안전보장 소귀에 경침기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 빈번

장애인이 휠체어리프트에서 또 다시 사고를 당했다.

지난 22일 지체장애 1급 장애인 박경석(39) 씨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 4호선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구 계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에 올랐는데 리프트가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멈춰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이다. 20여분간을 꼼짝없이 허공에 떠있던 박 씨는 우연히 계단을 지나던 지하철 승무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계단을 올라올 수 있었다. 박 씨의 항의로 동대문운동장역 부역장이 달려나와 빠른 시간내의 수리를 약속하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박 씨는 다시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다. 박 씨는 “보통사람이 1-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5분이나 걸려 가야하는 게 장애인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최소한 장애인들의 안전이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 짓은 사고, 미미한 대책

그러나 지하철 휠체어리프트의 잦은 고장으로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지난 6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규식 씨가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올라오던 중 추락한 사건이 발생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하지만 사고는 연이어 지난 8월에는 휠체어리프트의 고장으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이흥호(30) 씨가 박 씨와 똑같은 일을 당했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익실천시민연대의 전영욱 간사는 “뉴욕 등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호주, 캐나다 등의 서구선진국의 경우 지하철 대부분의 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씨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끝까지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냄은 물론 휠체어리프트 고장으로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과 함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관련한 집단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다.

### 경찰 폭력시위 유도 의혹

#### 평화 시위대에 돌 던진 후 발뺌

현지 경찰이 시위대열에 돌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측이 사건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분노를 사고 있다. (본지 9월 28일자 참조)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경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마치고 명동성당 앞 도로에서 촛불시위를 하는 대열을 향해 돌을 던진 이동환 씨(중부경찰서 보안과)는 효립스님 등 시위참가자들에게 붙잡혀 명동파출소로 인계됐다. 이 형사는 파출소에서 “실업자로 길을 지나던 중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고 진술했으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중부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는 현지 경찰로 드러났다. 이에 분노한 시위대열은 밤늦게까지 경찰에게

항의했으나, 중부경찰서(서장 유환춘) 측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은 해오지 않았다. 28일에도 경찰은 관계자를 명동성당으로 보내 비공식적인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신부 등)은 “평화적인 시가행진을 가능한 선까지 보장하겠다. 더니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종교인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폭력시위로 유도하려는 공작정치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시위행진 도중 대처한 전경들이 몸싸움 과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수녀들에게 방패를 휘둘러 옷이 찢기고 목걸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며 22일째 단식중인 전종훈 신부 등 사제단 신부 3명은 28일 현재 ‘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민주방송법 운동본부 발족

#### 전국적 서명운동과 홍보 박차

민주방송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한다. 민주인문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2백7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가두 홍보에 나서는 한편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카메라인권지기”

생생한 인권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 보내주세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열리는 4회 인권영화제에서는 ‘카메라인권지기’를 신설,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인권유린의 현장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동아리 등 누구나 환영합니다.

- ◎ 형식 :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
- ◎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 ◎ 마감 : 10월 10일
-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담당 김정아, 김일숙 02-741-240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9월 30일(목)

제 146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국가보안법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법률가 및 정치인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입장을 달리하는 변호사와 법학과 교수 등 법률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인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과거 정권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 인권침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신 법의 남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기준과 사용요건 등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과)는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고무찬양(7조), 불고지(10조), 구속기간의 연장(19조) 등의 조항은 모두 국가안보보다 독재정권의 강화를 위해 낳기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삽입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과 안전상의 문제라면 현행 형법만으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고무찬양 대신 선전선동 처벌"

국민회의의 유선호 의원은 불고지(10조), 참고인의 유치(18조), 수사관 상금(21조) 조항 등의 삭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7조에 대해서는 존치론을 폈다. 유 의원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7조 1항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고치면 7조에 의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7조의 완전삭제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유 의원은 "그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기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된 현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기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 "정부참칭 대신 정체부정 처벌"

반국가단체 규정인 국가보안법 2조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석태 변호사는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은 이미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은 막다른 한계점에 도달해 국내법 사이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진우 변호사와 자민련의 이동복 의원은 "북이 적대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외에는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된다"며 북한에 대한 이중적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만섭 국민의회의 총재대행 등 정계 인사와 민가협 회원 등 사회단체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러 사망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강원산업 노동자 5명이 20톤짜리 통크레인 집게 밑으로 들어가 쇠파루 청소작업(스케일)을 하다 통크레인의 집게를 임시로 지탱하던 철근이 휘어지면서 김동환(48)씨와 김충섭(28)씨가 집게 안에 압착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김동환 씨는 사망하고, 김충섭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회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해 변칙적인 작업을 지시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조 조직부장 방유원(32세) 씨는 "스케일 전용 진공흡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강노동자인 통크레인을 변칙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작업 전에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없었다"며, "사고가 난 통크레인은 제품운송 중에도 자주 낙하가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28일 긴급산업안전회의를 가진 노조는 "이번 사태는 변칙작업 관행과 안전관리소홀이 원인"이라고 확인하며 "회사측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없다면 작업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결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은 노조의 합의를 없을 경우, 작업장폐쇄이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인권하루소식> 99년 9월분 총목차(1446-146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46	9/1	1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 안재우기 주장/ 핵폐기물 위협 고조 - 핵발전소 등 정부방첩 철회 촉구
		2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참고자료> 5대 광역시 1천2백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 증지를 권고하는 서한
1447	9/2	1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쏜다 -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원칙
		2	조작수사 가혹행위 중단하라 - 민가협, 국정원 고문수사 규탄시위/ <참고자료>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제안 이유
1448	9/3	1	국보법 반대 전국 메아리 - 국보법 폐기 위한 전국 연대 필요성 제기/ <만화사랑방> 나쁜 버릇 못 고친 국정원
		2	성추행 교수 또 법정으로 - 창원대 법대생, 교수 고소/ 부산교도소 폭력사태 규탄 - 사회단체, "공안시범 총돌유도 명백"/ 8시간 일하고 싶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자 4백22인의 현실과 희망 조사
1449	9/4	1	대법원, 영남위사건 일부 파기환송 -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2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 한학협, 협박·희유한 경찰 고발/ 부천시 상동 강제철거 - 가수용시설 마련 요원
1450	9/7	1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예바다 사태 새 국면 - 개혁 이사진에 힘 실릴 듯/민교협, "서준식 무죄선고" 촉구
		2	'증거제관주의'를 위한 기도회 -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관련/ 주간인권흐름(8월 31일-9월 6일)
		3	<인권시평> 우리 할머니 선전대 (공선욱 소설가)/ <사고> 채찍과 격려, 하루소식의 자양분 - 인권전문지로 거듭나겠습니다
1451	9/8	1	서준식 씨 국보법 무죄 판결 -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에 유죄 선고/ <인터뷰> 단식 농성중인 김인국 신부 - 신부들, 단식 삭발로 국보법 폐지 의지 천명
		2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새로운 신문>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활보'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팀)
1452	9/9	1	범죄수사의 성격 '주한미군' -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협협 또 걸림돌/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한국타이어 해고자 연행 - 복지요구 농성도중
		2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 - 시민단체,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 활동은 하는 겁니까? -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에 정보공개 요구/ 버마 민주화 촉구 국제연대행동 돌입 - '9999운동' 버마 국내외서 전개
1453	9/10	1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 촉구 -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현장스케치> 진관스님 구속적부심 - "뭘까 문젠니까?"
		2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 긴급제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 철도청 노동자, 부당징계무효 소송제기/ <만화사랑방> 국보법 폐지 운동 각계 확산
1454	9/11	1	미군의 주권유린 용납 못해 - SOFA 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에 항의 서한/ 낮엔 복지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2	동티모르 학살 중단시켜라 - 유엔인권고등판무관, 특별회의 개최 촉구/ 우리의 양심 동티모르 - 현지 방문단, 정부 개입 촉구

<인권하루소식> 99년 9월분 총목차(1446-1464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55	9/14	1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안기부 명령이 되돌아 온다 - 국정원, 전국연합 전격 수색
		2	<인권시평>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이재훈 한겨레 기자)/ 주간인권흐름(9월 7일-9월 13일)
1456	9/15	1	인권침해엔 국경없는 제재를 - 국내인권단체, 동티모르 학살 규탄집회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 길로 - 천주교 사제단식에 신자들 동참
		2	'생산지 복지'도 말뿐이었나 -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사실상 제자리"/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1457	9/16	1	"7조만 부분 개정" 검토중 -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2	"불입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 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 노재중 또 고소 당해/ 국정원 악물수사 의혹 - 하영옥 씨 "박카스 먹고 이상증세" 주장
1458	9/17	1	"국보법 인권유린 우리도 안다" - 민회협, 국보법 토론회 개최/ 국내 34개 시민단체, 동티모르 즉각과병 촉구
		2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이성훈 파스르마나 사무국장)
1459	9/18	1	계속되는 학살 - 동티모르인 피난지에 민병대 급증/ 호주, 국보법 반대 집회 - 김대통령 방문에 현지언론 냉담
		2	생존보다 월드컵이 우선 - 강제철거에 머리 터진 삼암동 주민들/ "세상이 해도 너무합니다" - 아들에 이어 장애인 된 한 어머니의 설움/ 국보법 입장이 됩니까? - 전북지역 사회단체들, 김 대통령에 공개질의
1460	9/21	1	1백15개 단체 "국보법 반대" 결집 - 7조 폐지 동의하면 참여제한 없어/ <새로나온 책> 「국제인권법」 (박찬운 변호사)
		2	<인권시평> 동티모르와 세명의 영국여자들 이야기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주간인권흐름(9월 14일-9월 20일)
1461	9/22	1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2	<독자기고> 관은 백성에게 무엇인가 (김건환 건국대 교수)/ 인권회복에 명절도 있었다 - 한가위에도 농성장을 지키는 사람들
1462	9/28	1	4개 교단 "국보법 폐지" 목청 - 명동성당에서 범종교인대회 가져/ 철거위협에 떠는 오전동 - 일터·보금자리 모두 잃을 듯/ 주요공관안내/ <알림> 동티모르 민중 지원을 위한 모금
		2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1463	9/29	1	경찰폭력 좌시 못한다 - 인권연대, 10월 한달 간 집중 캠페인/ 국보법폐지 연대회의 결성 - 전국연합 등 261개 단체 참여
		2	장애인 안전보장 소귀에 경읽기 -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사고 빈발/ 경찰 폭력시위 유도 의혹 - 평화 시위대에 돌 던진 후 발행/ 민주방송법 운동본부 발족 - 전국적 서명운동과 홍보 박치/ <알림> "카메라인권지기"
1464	9/30	1	국보법 존폐 문제 격론 - 국민회의, 국보법 토론회 개최 / 추석연휴에 산재 날벼락 - 철강노동자 기계에 눌러 사망
		2·3	<인권하루소식> 9월분 총목차 (1446-1464호)

# 인권하루소식

## 99년 10월

### (제 1465호 ~ 1486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1일(금)

제 146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전운 감도는 한라중공업 조선소

### 경찰병력 배치...헬기서 유인물도 뿌려

겉으로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아래서 파업현장에 헬기가 뜨고 경찰병력이 배치되는 상황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40여일째 파업이 진행중인 한라중공업 전남 영암 조선사업장 주변에는 이틀째 경찰 병력 180여 명이 진주한 가운데 사업장 출입구 세 곳을 모두 봉쇄하고 있다. 또 28일에는 헬기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경고하는 유인물까지 뿌려 노동자들은 경찰력 투입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다.

한라중공업 노조는 지난 8월말 현대 그룹의 위탁경영이 결정되자, △고용

조정시 노사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의 원상회복 △징계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대측이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아 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 7일부터는 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막는 이른바 '옥쇄파업'을 진행중이다. 지난 21일 노조와 현대측 사이에 열린 협상도 결렬됐다.

한편, 28일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선전활동을 벌이던 해고노동자 김용갑(32)씨가 긴급체포되었다. 회사측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김 씨가 파업에 동참하자 그를 집단주거침입과 업

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를 면회한 진득훈 노조 사무국장은 "해고노동자로서 혐의에 비해 과도한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 4·3 다규 이적표현 아니다 제주고법, 원심개고 무죄선고

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잡들 수 없는 함성 4·3>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함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잡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4·3을 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디오 전체 내용이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97년 10월 <잡들 수 없는 함성 4·3>을 대학가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전원 동참

천주교 전주교구(주교 이병호 신부)의 전체 사제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주교구는 지난 28일 전주 윤호관에서 사제임시총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교구 내 모든 성당에 현수막 부착 △교구차원의 지속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개 등을 결의했다. 전주교구는 또 오늘 오후 7시 30분 전주 전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도 갖는다. 천주교 내 교구 전체 신부들이 시국시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행동하는 것은 천주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천교구(주교 나골리엘모 신부) 사제들이 지난 28일부터 9일간의 단식기도에 들어갔고, 광주교구(대주교 윤공희 신부) 정의평화위원회에도 매주 금요일집회를 열기로 했다.

####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 홈페이지 개설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반대 여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국민연대에서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신문 <활보>의 주요기사와 소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소 <http://freedom.jinbo.net>)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 캠페인 선포식

- 때 : 10월 1일(금) 오후 1시-3시
- 곳 : 서대문구 경찰청 앞 삼도빌딩 도로
-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 (문의: 02-749-9004)

### 유엔. 동티모르 인권조사단 파견 국제인권단체 "인도네시아 입김" 우려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이 파견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회기를 개최하고 53개 위원국 가운데 찬성 32, 반대 11, 기권 4로 동티모르에 국제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동티모르에서 활동하게 되는 국제조사단은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mas HAM) 및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1999년 1월 이후부터 동티모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자료수집, 증인 등을 통해 수집된 조사결과는 오는 10월까지 열리는 54회 유엔총회와 내년 3월 개최되는 56회 인권위원회 회기에 정식 보고된다.

이번 국제조사단에는 자의적 처형·여성폭력·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국내난민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표,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위원회가 포함됐으며 아시아의 전문가들도 적절히 포함시키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국제조사단 파견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무부장관 몰라디는 28일 "유엔인권위원회에 협력할 것이나 국제조사단의 보고서는 구속력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조사단의 권고 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조사단 파견 및 활동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국제적 인권단체들은 이 결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증거를 은폐하고 증인과 피해자를 협박해 증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조사단에 아시아 전문가들의 포함을 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에 가까운 인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길을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인권단체인 콘트라스(변호사 단체, Kontras) 역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는 아무 것도 조사할 수 없는 정부기관"이라고 지적하면서 "동티모르의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아니므로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가 동티

모르르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 눈치보기 일관

유엔 역사상 4번째로 소집된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특별회기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의 주도하에 인권위원회 위원국인 포르투갈 정부의 소집 발의로 개최됐다.

한국정부는 특별회기의 소집부터 결의안 채택 표결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기권으로 일관해, 다른 국가들의 눈치보기에 바빴다.

### 공무원·용역 등쌀에 수난 서초구청의 노숙 노인들

영구임대아파트의 제공을 요구하며 구청 내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구청과 용역직원들에 의해 잇따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방배2지구 재건축지역 세입자였던 신주희(63) 씨와 윤상준(65) 씨는 지난 29일 서초구청(구청장 조남호) 내에 있다가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여관에 옮겨지는 행패를 당했다.

두 노인은 97년 이 지역에 철거가 시작된 이후 무려 28개월간 천막생활을 해오다 지난 9월 10일 천막마저 철거를 당했다. 이들은 그후 서초구청 내 공원 및 건물 내부 등지에서 노숙을 해왔으며, 천막철거를 당하던 날에도 구청 직원들에 의해 봉고차에 실려 강제로 여관에 옮겨진 바 있다.

풍기가 있다는 윤상준 씨는 "천막 생활을 하다보니 파출부 일을 하던 아내도 병이 나서 다리를 못 쓰고, 천막에 있을 때는 신 씨랑 파지를 주워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가제도구까지 빼앗겨 다른 지역 철거민들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초구청 공보팀장 고선제 씨는 "여관으로 옮긴 것은 배려였다.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도시정비과의 하태영 씨는 "구청 내에서 벌어진 일들은 모두 용역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2일(토)  
제 146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현직검사 피소

###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

현직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안희권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복(48) 씨가 최근 안 검사실의 김내인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김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과 안희권 검사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유복 씨는 "검찰에 연행됐을 당시 구둣발로 옆구리를 차이고 바다에 몇 차례나 내던져 졌으며, 안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손에는 수갑을,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폭행 후유증으로 하혈과 혈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사실에 경악하며 검찰의 위상과 정의를 위해

서라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안 검사는 지난 94년에도 피의자를 독직폭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도 인권단체와 변호사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고소·고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또 국보법 7조나

### 안양사랑청년회 회원 연행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로 대거 연행됐다. 이번 연행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의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는 공안경찰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홍제동 보안4과 형사들은 지난 9월 30일 오전 7시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들고 안양사랑청년회 회원들 집에 들어와 회장 고선경 씨 등 회원 9명을 연행해갔다. 고 씨 등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청년회 활동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있으며, 연행자 중에는 이미 청년회 활동은 중단한 회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소식을 전해들은 연행자 가족과 나머지 회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역시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안양사랑청년회는 안양지역 철거주민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공부방 활동을 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을 펼쳐왔었다.

## 행사와 동정

- ◇ 한국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일시 : 10월 2일(토) 오후 2시 장소 :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장  
주최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의 02-714-4562)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창립식  
일시 : 10월 4일(월) 오후 6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추진준비위원회 (문의 02-708-4701)
- ◇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25주년 기념행사 및 기쁨과 희망 시목연구회 제 2회 심포지엄  
일시 : 10월 4일(월) 오후 2시, 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전주교 서울대교구 명동성당  
주최 :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 ◇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실 개소  
장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8호  
전화 : 02-708-5858 / 팩스 : 02-708-5859

▶ 2면으로 이어짐

### 〈인터뷰〉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인권상담실장 "핀잔도 경찰폭력이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10월 1일부터 한달 간을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기간으로 설정하고 올 한해 문제가 된 경찰폭력 사례를 짚어보며 경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의 고상만(30) 상담실장을 1일 캠페인 선포식이 열리는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만나봤다.〈편집자 주〉

● 이 시기 특별히 경찰폭력 캠페인을 여는 이유는?

가장 작은 것부터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현 시기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에 있어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인권침해에 둔감한 사람이 남의 일 같은 문제에 큰 문제의식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경찰폭력은 대부분의 국민이라면 한번쯤 당해봤을 만한 문제로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총기남용과 구타 등 거대한 것을 떠올리며 경찰관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수치심 자극, 편견, 수사시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행위 등은 경찰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사람들이지만 시민들 위에 군림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경찰폭력이며 시민은 이러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이러한 태도로 일관했고 시민 역시 경찰의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밀비제한 경찰폭력을 뿌리 뽑고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때가 왔습니다.

● 경찰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그 근절 대책은?

인권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경찰관들의 관성은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로막았고, 권력 남용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이한 인식도 큰 작용을 했죠. 따라서 시민들은 경찰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끝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관들에게 시민의 인권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경찰폭력 발생에 따른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지금 검찰이 경찰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제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24시간 경찰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집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일선 파출소 앞에서 항의시위도 벌이고 개혁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

입니다. 이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교도소, 국정원, 검찰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곧 이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 ▶1면에서 '민영화'

주제발제에 나선 김윤자(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외채와 부실 경영을 이유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의 경우 사기업보다도 부채율이 낮아 해외매각이나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외채의 조기상환 의무만 남게 된다"며 "한전의 민영화를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은 거대기업의 독점을 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조개선은 민영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해 책임을 높이는 한편 노동자와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비용절감을 내세워 3천8백명을 정리해고한 전력산업체가 앞으로 해외매각 등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비용증가, 물가상승,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체 노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영화 반대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이 입법화 된다면 전면 파업 투쟁까지도 벌일 태세다.

### <국제인권소식>

####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 중이던 학생이 경찰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학생은 람퐁대학에 다니는 유즈프 리자이(23) 씨로, 목격자들에 따르면 실탄이 폭을 관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위는 인도네시아 의회가 지난 23일 국가보안법안(State Security Bill)을 통과시킨 것과 이에 대해 23-24일 이틀간 벌어진 항의시위 과정에서 7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숨진 사건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위를 촉발시킨 국가보안법안은 △비상시 군부가 민정을 접수하고 △군부의 언론통제와 제관없는 구금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외에도 69년 수카르노 정부가 제정한 전복활동금지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독립을 요구하는 동티모르의 활동가들을 탄압해 왔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련법들의 폐지를 권고해 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5일(화)

제 14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실적올리기에 눈 먼 수사관들이 또다시 무고한 시민을 강제연행·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처럼 서울에 온 양경주(36, 제주도) 씨는 지난 2일(토) 오후 3시 상봉개발업을 하는 친구 김충범(36, 서울 잠원동), 김충환(33) 씨와 함께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통신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다. 현재 검찰은 '불법 감청기 판매업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 씨 등은 이날 세운상가에서 단속작업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봉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주 씨는 "뒤에서 품짝 말라고 하면서 건장한 남자 4명이 덮쳐 인신매매 당하는 줄만 알았다. 그들은 팔을 뒤로 쫓아서 수갑을 채우고, 혐의가 뭐냐고 문자 목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충범 씨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50여 미터 떨어진 서울 72차3472 차량(프레지오)에 끌려가서 휴대전화 수첩 등을 빼앗겼다"며 "검찰은 눈이 마주치자 차 바닥에서 1미터쯤 되는 쇠파이프 7개 중 하나를 꺼내 휘두르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이 끌려간 차량은 서울지검 소속차량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수사관들이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착오였다면서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후 풀어주었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김상범(33, 감미전자) 씨 등 주변 상인들도 40여분간의 이 과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양 씨 등은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라도 관계자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운상가에서 단속을 지휘하는 서울지검 제3차장실 윤 계장은 "수사관이

30여명이라 관련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폭력이나 쇠파이프 사용은 있을 수 없다. 사실일 경우 정식으로 고소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규택(한나라당, 법사위) 의원

### 주요공판안내

▶ 10월 8일(금)

이장희 외1(국가보안법) 서울지법 실의 박영규 보좌관은 "수사실적을 위

524호, 오후 2시, 4단독, 속행

###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 미주·호주 인권단체 지지서한 발송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등 미주와 호주 지역의 17개 인권, 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사발단식농성을 벌인 천주교 신부들을 지지하는 편지를 지난 9월 30일 공동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이들은 "남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향상을 위해 반인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식농성에 고무받아 국제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편지에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인권위원회와 미국내의 인권단체들, 재미한청년 등 동포단체들이 함께 했다.

#### 천주교 신부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정리

지난 9월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사발 단식농성을 전개해왔던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천주교연대)가 지난 2일 단식농성을 정리했다. 천주교연대는 매주 월요일마다 각 교구별로 순회기도회를 여는 등 보다 대중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김병상 신부(부평1동 성당) 등 18명의 신부들이 28일부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천주교 인천교구는 오는 6일까지 단식농성을 전개하기로 했다.

#### 1차 범국민행동의 날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오후 2시 서울 대호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 종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정당 등 각계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노수희 전국연합 의장 등의 사발식이 열렸다. 노수희 의장 등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6일, 30일에도 2차, 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인 권  
시 평

###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 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3월 13일의 일이었다. 이제 지방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화가에게 징역 10월에 선고 유예를 내린 것이다.

변호사가 위헌을 제청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하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나 이번 재판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의 실상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그림에 대한 해석이었다. 재판부는 그림 상단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안팎" 구도로 되어 있다는 미술평론가 성원경씨의 해석을 수용할 것이다. 그림 속의 농부가 그림 "안쪽"에 묘사된 지상낙원을 오염시킬 핵무기, 레이건 미국 대통령, 김일성 등을 포함한 쓰레기 더미를 쓰레질로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그림을 "안팎"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믿지만 이번 판결에는 해석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실 예술 작품을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예술적 표현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굳이 현실에 대한 주장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논문이나 사실과는 달리 예술작품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꿈과도 같은 것이다. 그림의 상단에 있던 안쪽에 있던 신학철 씨의 "지상낙원"은 주장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꿈처럼 표현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화가가 작품을 통해 조국통일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 말을 "주장"이 아닌 "꿈"의 형식을 빌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렇다면 작가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 된다.

"국민의 정부"는 최근 들어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한다는 포부를 부쩍 자주 피력하고 있다. 최근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서기 2000년을 100일 앞두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까지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신 화백에 대한 유죄 판결은 "문화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적 창조성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어떻게 창조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꿈꾸는 자유가 억압된 사회, 그런 사회는 창조성 일반이 위축된 사회일 뿐이다. 정부는 지식기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적 창조성을 높이는 표현의 자유를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주간인권호름

(99년 9월 21일-10월 3일)

1. 휴일근무 노동자 산재사망...천국에선 편히 쉬길 추석 연휴 기간중 안전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강원산업 노동자들이 기계에 압착되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료와 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 보도(9/30)

3.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상차별 굴레 일제 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을 하고도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제외된 박태홍(사망) 씨의 아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포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9/27) / 보훈처 관계자는 "사회주의 활동이 독립운동의 방편인지 목적인지가 포상대상 선정 기준"이라고 해명

4. 고문하려면 재산부터 숨겨야 할걸?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및 김근태씨 고문수사 사건의 고문 경찰관에 대해 국가가 각각 2억9천8백90만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9/28)

5. 알 권리 원천봉쇄...국회의원인지 마피야들인지 국정감사중인 몇몇 삼임위원회, 국감 모니터 나선 시민단체들의 국감장 방청을 원천봉쇄(9/29)

6. 고양이에게 맡겨둔 생선 풀 경찰이 개인의 전과조회 및 주민조회 자료를 무더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사실 드러나(10/1) / 새한건설 노동, 개인자료를 회사에 넘겨준 강남경찰서 정보과 형사를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로 고발

### ◎ 국감 초점 ◎

1. "반발하는 의료사고, 구조조정이 원인" <보건복지부 국감> 지난 2년반 동안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가 무려 49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도 97년 196건, 98년 212건, 99년 7월까지 109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 / 조성준 의원(국민회의) "대형병원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규직 의료인력을 줄이고 임시직이나 촉탁직을 늘리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9/29)

2. 한반도 사방팔방이 지뢰지대 <국방부 국감> 한국전쟁 이후 후방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 수가 모두 7만5천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9/2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6일(수)

제 14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모연

###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인 김형찬(29) 씨가 행방불명돼 김 씨의 신변을 둘러싼 의구심과 가족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다.

김형찬 씨의 아버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회사에 나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아무 연락도 취해오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김 씨가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하듯 김 씨와 함께 단체 활동을 해온 김 모 씨는 "5일 오전 형찬이가 국정원에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연행됐다는 익명의 전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상황에 여기에 이르자 김 씨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5일 오후 7시 국정원을 방문, 국정원측에 김 씨의 신변 확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김 씨를 연행, 조사한 적이 없다"며 체포사실을 부인했으며 타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수사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5일 밤 11시 50분까지 국정원 앞에서 김 씨의 신변확인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김 씨는 지난 96년 12월 수배자를 찾던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불법 연행됐다. 연행된 김 씨는 수배자가 아니라는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파출소와 경기도경 공안분실에서 '복에 다녀오지 않았냐' 등의 수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했는데 이에 분신을 기도, 심한 화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와 권영혜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 안사청도 이적단체

### 짐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지난 9월 30일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됐던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 새로운 책

## 『인권수첩 - 알아야 지킨다』

한상범 외 4인 공저/ 현암사/ 5천원/ 157쪽

한상범(동국대 법학) 교수와 남궁은(신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씨 등이 공저한 『인권수첩』이 발행됐다.

저자들은 머릿말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인권에 대해 알고 지켜나가는데 『인권수첩』은 작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수첩은 불심검문과 연행, 형사법상 피의자의 제반권리에 대한 8가지 권리와 배상 및 보상제도 4가지, 수행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액심판제도와 소비자 피해, 언론피해, 정보공개청구, 부당해고와 산재, 전화피해, 직장내 성희롱 등 총 27가지의 인권 침해유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각의 법 조항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응방법과 구제절차를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락처를 수록했다.

이 가운데 '불심검문에 응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불심검문의 법적 의미, 실제 사례들, 대응자세와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배상판결까지 소개하면서 불심검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것을 주의시킨다.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9개의 법 중 인권 관련 조항만을 발췌해 소개하고 있다.







# 공교육은 죽고, 사교육은 확대 한국교육연구소, 공교육 현실 진단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유상덕)는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공교육의 현실 평가와 이에 대한 전망모색에 나섰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규환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빈부에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며 이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교육체제가 확고히 정립, 실행되어야 한다"며 "공교육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폭넓은 투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두휴 교수(여수대)는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감소해 공교육 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등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인해 현재 공교육은 심각한 해체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공교육의 위기는 국공립대의 민영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교육의 해체는 개인에 대한 사교육화로 나타났고 이러한 현실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 과중된 입시경쟁, 대학간의 서열화 등을 낳아 결국 물질만능주의와 개별화를 초래, 인간존중 사상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98년 한국의 교육비를 조사한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사교육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에 따르면, 사교육의 증가는 정규학교 교육 이외에 과외(사설학원) 등의 증가로 나타나, 98년 현재 과외를 받는 사람은 65년에 비해 53배나 증가했으며 강수도 역시 3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라 사교육비 총량도 크게 높아져 77년의 사교육비 총량규모를 1이라고 한다면 90년 11.9로, 94년에는 15.5로 그리고 98년에는 21.7로 변화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를 비롯해 전국 60여개 대학 대학생들 역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산별적인 집회를 벌였다. 서울의 경우 대학생들

은 종로공원에 모여 국공립대 민영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에는 서울대에 집결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 정치인 심판운동 벌인다 국감시민연대 시민행동 계획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방청이 거부되는 사태가 빈발하자 시민단체들이 '방청불허 정치인 심판운동' 등 단호한 시민행동을 계획 중이다.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공동사무국장 이태호, 국감연대)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에 보장된 방청평가권

을 보장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단호한 시민행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감연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청 불허 상임위원회 및 문제 발언 의원들에 대한 항의방문, 항의전화 걸기운동을 전개하고, 의원별로 방청찬반 여부를 물어 이를 의원평가에 반영,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넘어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감연대는 "10월 7일 'KBS 길증섭의 쟁점토론'에서 ARS 여론조사 결과 방청허용이 6만1천1백41건, 일부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천6백90건으로 94.3%의 시민이 시민단체의 국감 방청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당 원내총무들이 국감연대의 대화 제의마저 거절했다면서 "말실국감 속에서 누려온 갖가지 반유권자적 직무유기가 유권자 눈앞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의원들이 방청을 거부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평가했다.

## 행사와 동정

- ◇ 장애인 직업 재활권 법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1999 다시 만나는 전태일  
일시 : 10월 9일(토)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전태일 기념사업회 (02-3672-4138)
- ◇ 국가보안법 무조건 개정을 위한 엠네스티 거리캠페인  
일시 : 10월 9일(토)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옆  
주최 : 엠네스티 한국지부(담당 김철효 053-426-2533)
- ◇ 국가보안법 반대 집회  
일시 : 10월 11일(월) 오전 9시 장소 : 올림픽 체조경기장  
주최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담당 김정희 02-741-5363)
- ◇ 국가보안법 반대 거리선전(세계 NGO 대회 부스)  
일시 : 10월 11일(월)-15일(금) 장소 : 올림픽 펜싱경기장  
주최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담당 김정희 02-741-5363)
-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토론회  
일시 : 10월 11일(월) 오후 2시 장소 : 종로성당 3층  
주최 : 인권실천시민연대(담당 고상만 02-749-9004)
- ◇ 포르노/미디어/여성  
일시 : 10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담당 김이윤상 02-576-712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12일(화)  
제 14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전 세계 NGO(민간단체)들의 축제의 장이자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공간인 세계 NGO대회장에서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벌이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경호원과 경찰에 의해 쫓겨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 NGO대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주변에서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단체 활동가 50여명이 삼삼오오 흩어져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공대위 회원들이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1-2 출입구 쪽으로 이동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도착했고, 그 순간 사복차림의 청와대 경호원들 20여명이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퍼부으면서 민간단체 활동가들을 힘으로 밀어냈다. 잠시 후 송파경찰서 소속 26중대 60-70명의 전투경찰이 배치되면서 몸싸움이 격해졌고, 이들은 활동가들을 포위·고립시킨 가운데, 공식행사가 끝난 낮 12시경에야 풀어주었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의 최영희(28) 씨는 "어느 곳에서든지 피켓시위가 가능하더니 경찰이 나타나 '1-2출입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잡아, 밀어'라는 소리를 지르며 몰아부쳤다. 15명 정도가 계단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26중대 중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테면 하라"고 말해 활동가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이날 사태와 관련 공대위는 긴급성명을 발표, "평화로운 시위조차 폭력으로

로 진압하는 물지각한 행동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행차가 NGO의 평화적 의견표명 보다 중요하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NGO대회인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회 주최측에서도 한시간 반 동안 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제적인 NGO대회 사상 대통령의

시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시위를 진압한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NGO대회 개최식에 참여한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은 대통령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인권활동가로서 참여했다"는 발언을 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실소케 했다.

## 주요공판안내

▶ 10월 13일(수)  
김낙준(국보법,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서울지법 302호, 오전 10시, 속행

## 경찰청 "부당한 인권교육 실시" 약속 인권연대 주최 토론회, 경찰폭력 백태 폭로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인권캠페인'을 10월 한달 동안 전개하고 있는 인권실천시민연대(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연대)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찰청이 보내온 경찰청장 명의의 회신문 2건을 공개했다.

인권연대가 '연행과정의 경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차량의 유리창 썬팅을 제거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경찰청은 7일자 회신문을 통해 "경찰차량을 보급하면서 썬팅을 한 적이 없다"며 "관용차량은 물론 개인 소유 차량의 모든 썬팅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신문에서 "경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인권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경찰관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경찰청장의 약속과는 달리 토론회에서는 △불법 불심검문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수사과정에서의 폭력 △여성에 대한 성추행 △총기남용 등 심각한 경찰폭력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제시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입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와 경찰수사권 독립 등의 자율적인 통제와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시 등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권연대는 오는 20일 경찰청 앞 항위시위, 21일 목요일도회를 가지며, 각종 경찰폭력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외국인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인 (주) 만인산업(대표 정영춘)이 본래의 목적인 연수생들의 보호와는 달리 폭력과 공갈협박을 일삼아온 사실이 밝혀졌다.

구미공단의 실 제조업체인 (주) 쌍마섬유(대표 김동원)에서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일하는 중국인 여성노동자 17명은 3개월씩 임금이 체불되고, 추석 연휴기간 중에 식사조차 제공받지 못하자 항의표시로 지난달 27일 일제히 출근을 거부했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회사는 위로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5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만인산업 대표 정영춘 씨는 지난 5일 서울에서 구미 현장에서 달려와 연수생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한 5만원은 임금에서 공제할 것이며, 원래 연수업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귀국행 비행기 값도 임금에

서 공제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들 중 주동자급인 추홍화, 유옥 씨에게는 강제출국시키겠다고 욕박질렀다.

이후 정 대표는 야간 근무조에 열쇠를 인계하러 현장에 들어오던 연수생 용진매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2주의 상해도 입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12일 진상조사에 나선 모경순(구미 가톨릭근로자센터) 씨는 "17명의 연수생 모두 정 씨에게 폭행 당한 경향이 있고, 심지어 요전 방 씨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비 48만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분개했다.

또 모 씨는 "우리나라 간호사나 광부가 독일에 노동이민을 갔을 때는 한독 정부간 협상이 이뤄졌지만, 중국과 한국은 영리를 위한 사기업이 계약을 맺고 있어 노동착취의 원인을 제공한다"

###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지난 11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아시드)' 소속 8개 청년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의 비평화적 성격을 비판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군 2진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아시드는 "민병대가 동티모르 난민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파견에 대한 찬반논쟁은 자칫 소모적일 수 있으나, 파병된 한국군이 오히려 동티모르 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드 소속 '젊은 이웃'의 김정현 씨는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한국군은 아무런 반성도 없었고, 심지어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무기까지 팔아 놓고서는 인권을 내세워 동티모르 파병을 운운한다"며,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 '은퐁이 무기'라는 특전사 파병을 선택한 것도 문제"라며 비판했다.

김 씨는 "평화유지 활동은 일반전투와 달라 언어습득은 물론 민병대와 일반주민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하고, 평화와 인권 가치에 대한 신념 등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동티모르 평화정착을 위한 종합적 구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주 등이 중심이 된 유엔의 다국적군은 독립운동세력의 무장해제를 포함한 동티모르 전지역의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군은 앞으로 3년간 동티모르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혀 동티모르 민족의 자주독립의 길은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며 "노동부가 책임성을 갖고 연수생을 도입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소장 허창수)는 △정영춘은 용진매 씨등 연수생 17명에게 공개사과할 것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만인산업의 사후관리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사후관리업체 감독을 강화할 것 △노동부는 연수생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가협 등 7개 사회단체 앞으로 보내온 회신문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론수렴 절차는 법안 통과 후에도 충분히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법무부는 ▲재정절감 ▲교정시설 확충 ▲다양한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화 효과의 증대 등을 이유로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제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제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교도소 운영의 투명성 보장 및 국민의 감시가 약화될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민영교도소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민간단체들은 또 "민영교도소 도입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는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 보석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13일(수)  
 <호 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 대변인인 크리스토퍼 아귀통(46)씨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입국금지 당해 일본으로 강제 출국될 상황에 처했다.

아귀통씨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10일 일본으로 출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던 길이었다. 오늘 오후 4시 50분 '투자협정·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실업 관련팀과 실업자 운동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이창근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대구라운드 기간 중에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한 이유로 입국 금지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아귀통씨는 대구라운드에 참석하였다가 노동조합기업인수지원센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귀통씨는 "이런 이유보다는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입국심사과는 "아귀통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 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했다"면서 "누가 요청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아귀통씨의 추정을 뒷받침했다.

아귀통씨는 대구라운드에 참석하여 "신자유주의는 민중의 적"이라고 말하는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을 했다. 그는 오는 11월 30일 미국 씨애틀에서 열리는 WTO 밀레니엄 라운드 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로 프랑스 실업자운동을 조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NGO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활동가의 출입이 금지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항의 전화와 팩스: 청와대 전화 730-5800  
 팩스 770-0202  
 법무부 전화: 500-2250  
 팩스: 503-3532  
 법무부 입국심사과장 전화: 500-2283-5  
 팩스: 503-7098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0월 14일(목)

제 14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외국 진보인사 블랙리스트 운영

###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입국금지 당해

프랑스 실업자운동의 대표적 인사인 크리스토프 아기통(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대변인·46) 씨가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공항에서 출국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3일 오후 4시 30분 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아기통 씨는 공항 출

입국관리소로부터 입국을 저지당해 오후 7시 45분 경 프랑스로 출국했다.

아기통 씨는 지난 6일부터 사흘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했으며 그후 일본에서 나흘간 머무른 뒤, 13일 국내에서 '투자협정·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관련자들과 실업자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갖기 위

해 입국하던 길이었다.

이날 아기통 씨와 전화통화를 한 이창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사무국장은 아기통 씨가 "출입국관리소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과 접촉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랐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기통 씨는 대구라운드 참석 기간에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등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신자유주의는 민중의 적"이라고 말하는 등 강도 높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와 관계자는 "아기통 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시켰다"며 "더 구체적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울국제민중회의와 실업자대행진에 참석했던 독일 브레멘 대학의 출거 하이데 교수도 일주일 전 불명확한 이유로 입국을 금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대표 김진균)는 긴급 성명을 발표, "당국이 외국의 진보적 활동가들을 소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시대착오적 관행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며 "입국불허의 근거를 밝히고 구시대적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일본 인권단체, "국보법 철폐" 서명운동 개시

일본의 '한국양심수를 지원하는 회 전국회의'(대표 와타나베 가즈오)는 지난 12일부터 도쿄내 역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국회의는 11월 9일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오는 20일엔 집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 "탈북자 난민신청, 북한인권 해결 열쇠"

### 탈북자 김길선 씨, NGO 대회 참석 발언

중국 도처를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탈북자들은 북이든 남이든 조국 땅에 정착하길 원하고 있다.

98년 북한을 탈출한 뒤 올해 남한에 들어온 김길선(44) 씨. 김 씨는 13일 NGO 세계대회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아시아 난민실태와 NGO의 역할'이라는 워크숍에 참석,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살아남느냐 마느냐의 가장 초보적 인권문제라고 주장했다.

"탈북자의 80-90%는 오로지 배고픔을 이유로, 살아남고 보자는 이유로

북한을 떠납니다. 그러나 탈북하는 순간 북한에서는 그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탈북자들은 스스로 인식하던 못하던 정치적 난민에 해당합니다." 김 씨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적·정치적 인권문제를 풀어가는 '창구'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는 또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당국과 주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 남

이나 북이나 모두 조국입니다. 누가 중국에 정착하길 원하겠습니까? 탈북자들은 허락만 되면 남한에 오고 싶지만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저술 활동까지 한 덕에 김 씨는 남한당국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평범한 탈북자들에게는 남한정착의 기회가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 씨는 탈북자들의 처참한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탈북자들은 직업을 구하기도 전에 독약부터 구합니다. 집허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 노숙철거민 강제수용 시비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

서초구청 직원들이 구청 앞에서 35일째 노숙투쟁중인 철거민들에 대해 계속 '복지관에 입소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10월 1일자). 13일 오전 서초구청 하재영 도시정비국장 등 직원 10여명은 노숙중인 윤상준(64) 씨를 강제로 차에 실어 서초구내 사회복지관에 보낸 데 이어, 오후 들어서도 철거민 신주희(63) 씨를 강제로 차에 실으려 했다. 구청측은 지난 9일에도 윤 씨와 신 씨를 강제로 복지관에 입소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재영 국장은 "동사할 우려가 있어 보호와 안전차원에서 강제로 복지관에 보냈다"며 "잠깐 복지관에서 잔다면 낮에 와서 펴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주희 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올다리 밖으로 나가 먹으라'며 발길질까지 해댄다"고 주장했다. 구청직원 4-5명은 근무시간 내내 신 씨의 주위를 뒹 돌고 있다.

양제역과 맞닿아 있는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와 보건소 등과 함께 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울타리 안에는 농구대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 씨와 윤 씨는 직원들의 감시로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인도에서만 서성이고 있다.

## <현장스케치> 밀레니엄라운드 반대 캠페인

### 밀레니엄 앞둔 지구촌의 우울한 미래

검은 망토를 늘어뜨린 초국적 대자본이 협상국은 얼굴을 뒤에 감추고, 웃는 얼굴로 서 있다. 그 주위에 한 노동자가 열심히 나사를 조이며 돈을 주워 모아, 초국적 대자본의 손아귀에 쥐어 주고 있다. 또, 한 실업자는 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며 열심히 구인광고를 뒤적이고 있다.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행인들의 눈길을 잠시동안 붙잡은 이 장면은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이 연출한 퍼포먼스이자 세기말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다지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 항상적 경제위기를 약속하는 투자협정과 밀레니엄라운드

13일 열린 '투자협정·밀레니엄라운드 반대를 위한 제1차 대중캠페인'에는 '민중행동' 소속 단체에서 나온 스무 명 남짓의 사람들이 '투자협정과 WTO는 제2의 환란을 불러옵니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중심으로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투기자본만 살찌우고 민중생존 위협하는 투자협정 반대", "소주값 인상 주범 WTO 반대" 등의 구호가 외쳐졌고,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도 퍼포먼스와 "소주값 인상" 이야기에 발길을 멈췄다.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씨는 "투자협정 및 WTO 밀레니엄라운드는 우리의 삶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서민층과 동고동락해온 소주의 값이 천 원에 육박하게 된 데는 WTO의 명령과 협박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유전자 조작된 식품의 수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전자 조작된 식품이 우리 시장을 돌아다녀도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중행동'은 "대우사태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11월 위기설이 퍼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해외자본의 '투기'를 보장하는 투자자유화 협정이 존재하는 한 항상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행동'은 오는 11월 30일 밀레니엄라운드가 열리는 미국 시애틀 현장에서 전세계 민중들과 연대하는 대규모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99년 10월분 총목차(1465-148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76	10/16	1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 고려화학 연기흡 씨, 2년새 2차례 부당해고/ 근로자 없는 근로자 복지법 -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국보법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
		2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김형찬씨, 지난 10일 돌아와 - 심경정리 위한 잠적/ 양민하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 6백명 /오트론노동자 또 폭행당해 - 사측 농성장 덮쳐
1477	10/19	1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복지를 향한 고난의 행진 -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국보법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2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이재훈 한겨레 기자)/주간인권흐름(10월 11일-17일)
1478	10/20	1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새로나온 책>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 (1)」
		2	서초구청, 대통령 행차를 이유로 노숙철폐기 쫓아 내/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 공공성 포기 철회 요구/ 검찰 증거 비과학적 -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새 주장
1479	10/21	1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한전민영화 반대 - 성직자에 이어 교수도 동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국보법 속보> 광주전남, 천막농성 돌입
		2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여성구직 약제에 약제 - 장시간 노동요구에 연령제한도/감청현황을 밝혀라 - 청주 정병위, 자료공개 요청
1480	10/22	1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검찰, 국감에 거짓 답변 - 피해자에게는 사과
		2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 통신티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임대아파트법 개정 논쟁,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만화사랑방> 보안관찰, 이젠 그만해라
1481	10/23	1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2	에바다폭력사태, 제단축이 사주 - 원장 직무대행, 농아학생 입막음 시도/ "원지복지, 품도 꾸지 마라" - 41일 단식에 회사측 꾀적 안해/ "공교육 포기"반발 -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1482	10/26	1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해심 비켜간 기만책" -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대/<국보법 속보> 청년진보당, 단식농성 돌입
		2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지적 -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주간인권흐름>(10월 18일-24일)
1483	10/27	1	시대착오적 사상제관 진행 -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폐렴·심장병에 명든 철거촌 어린이 - 공간마을 철거민, 명동성당서 모금운동/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
		2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인권시평> '아줌마부대'가 만드는 '조용한 혁명'(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1484	10/28	1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새로나온 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2」 (제작 올림피아프로덕션)
		2	에바다 파행 어디까지 가려나 - 교사들 학교출입 못하니 4일/검찰, 이유도 고지 않고 민주노총 관계자 참고인 수사/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1485	10/29	1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 국가보안법 감의 등 감단 투쟁 병행/<기자의 눈>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국보법 투쟁 속보> 인천지역 동참, 기독교계 정치권에 협의서한 발송
		2	20세기 돌아보며 새천년 인권보장 - 제4회 인권영화제 11월 26일 개막/인천 한양공영, 해고자 복지 약속 불이행/<만화사랑방>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속인 법무부
1486	10/30	1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2·3	99년 10월 목차(1465-1486호)

# 인권하루소식

## 99년 11월

### (제1487호 ~ 1507호)